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3-32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업유치모델 연구

Research on a Jeollabukdo-specific Model for Attracting Enterpris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김시백 김수은 정미선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연구진 소개

김시백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은

경희대학교 경제학박사(국제경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정미선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3-32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업유치모델 연구

Research on a Jeollabukdo-specific Model for Attracting Enterpris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김시백 김수은 정미선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김시백	연구위원	연구총괄
공동 연구	김수은	연구위원	핵심 및 연계과제 발굴
	정미선	전문연구원	기본 현황 분석

연구관리 코드 : 23JU1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전북형 기회발전특구의 내용 및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を 가지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전북으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협약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23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해 취합·가공되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 기회발전특구를 구성하는 특화산업, 투자환경, 특구인력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 및 연계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기본계획 작성에 활용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일반 현황 및 추진 가능 시점, 기업 수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에 맞는 후보지와 타겟산업을 선정함
 -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1차 수요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시점에 따라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 조사를 수행함
 - 기존에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과제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전북 연구개발특구 확장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6대 혁신성장산업 및 사업 후보지와 연계되는 산업, 투자 의향 기업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였음
 - 이차전지 등 에너지산업, 농생명 바이오산업, 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 등을 중심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후보 지역과 연계되는 산업, 사전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투자 의향 기업의 연관 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2. 결론 및 정책제언

■ 기회발전특구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법 특례 적용을 통한 기업유치모델을 제안함

- 농생명바이오산업은 6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4개의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전북특별법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등의 특례를 통한 시책 추진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생명바이오산업 기업 유치 모델을 구축
-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은 2개의 시군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각각의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간 연계하여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 이차전지산업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 지정 1순위로 두되, 새만금 산업용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인근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산업 집적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완주 수소특화단지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융복합 R&D와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거점으로 활용하여 추가 수요에 대비하는 전략을 제안
- 관광산업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종합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진행하고 전라북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특별법을 통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을 하는 조건으로 동부권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
- 방위산업의 경우, 현재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발사 시험체 실증을 위해 대규모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 협상이 1~2건 진행되고 있어 방위산업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함

■ 지역낙후도에 따른 차등적인 인센티브 적용된 기회발전특구 추진이 요구됨

- 지역별로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제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차등적인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가 필요

차 례

CONTENTS

요약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목적 5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6
가. 연구 범위 6
나. 주요 연구 내용 6
3. 연구의 추진 체계 7
4. 연구 방법 8
가.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8
나. 전문가 자문 8

제2장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현황 분석

1. 기회발전특구 개념 및 정책 동향 11
가. 기회발전특구의 개념 11
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동향 13
다. 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 사례 15
라. 지역 상생형일자리 추진 사례 19
2. 전라북도 전략산업 여건 분석 24

가. 일반 현황	24
나. 기회발전특구 산업 현황	39
다. 현황 분석에 대한 시사점	51
3. 기회발전특구 후보지 검토	55

제3장 기업 유치 추진 모델 검토

1. 기업 유치 후보지와 현황조사	61
가. 기업 유치 후보지 선정 개요	61
나. 기업 유치 후보 지역	63
2.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 검토	78
가. 후보지별 검토	78
나. 산업군별 추진 방안 제안	80
3. 산업별 전복특별자치도 특례 활용 가능성 검토	82

제4장 전복형 기업유치모델 추진 방안

1. 투자 의향 기업 검토	93
가. 기회발전특구 투자 의향 기업 조사	93
나.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104
2. 전복형 기업유치모델 기본 방향	105
3. 타겟 산업별 기업 유치 전략 및 공간 구상	107
가. 농생명바이오산업	107

차 례

CONTENTS

나.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	109
다. 이차전지산업	110
라. 관광산업	111
마. 드론 및 방위산업	112
4. 타겟 산업별 핵심과제 및 연계과제	113
가. 공통 과제	113
나. 농생명바이오산업	115
다.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	117
라. 이차전지 산업	122
마. 관광산업	123
바. 드론 및 방위산업	123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127
2. 정책 제언	133

참고문헌	134
------------	-----

영문요약 (Summary)	135
----------------------	-----

부록	141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1-1] 전라북도 산업단지 추이	4
[표1-2]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단계별 수행 내용	5
[표 2-1]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12
[표 2-2]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12
[표 2-3] 타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	13
[표 2-4]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나타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비교	14
[표 2-5] 영국 레벨링업 자본별 주요 정책 방향	17
[표 2-6] 영국의 레벨링업 영역과 정책 과제(미션)	18
[표 2-7] 지역 내 산업구조 현황	24
[표 2-8] 산업별 사업체수·종사자 수	25
[표 2-9] 신생기업 생존율	26
[표 2-10] 전라북도 산업별 취업자 수	27
[표 2-11]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28
[표 2-12]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별 혁신자원 분포	32
[표 2-13] 공공기관 현황	33
[표 2-14] 대학별 특성화 분야 및 관련 학과 현황	35
[표 2-15] 국공립 연구기관 현황	36
[표 2-16] 최근 3년간 산업별 전라북도 투자기업 MOU체결 건수	39
[표 2-17] 최근 3년간 산업별 전라북도 투자기업 MOU체결 고용규모	40
[표 2-18] 전략적 기업 유치 산업군	42
[표 2-19] 농생명바이오 종사자 기준 LQ	44
[표 2-20] 이차전지 종사자 기준 LQ	45
[표 2-21] 목적기반 모빌리티 종사자 기준 LQ	47
[표 2-22] 관광 종사자 기준 LQ	48
[표 2-23] 전라북도 투자유치 강점과 약점	54
[표 2-24] 시군별 수요 조사 결과	57
[표 3-1]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61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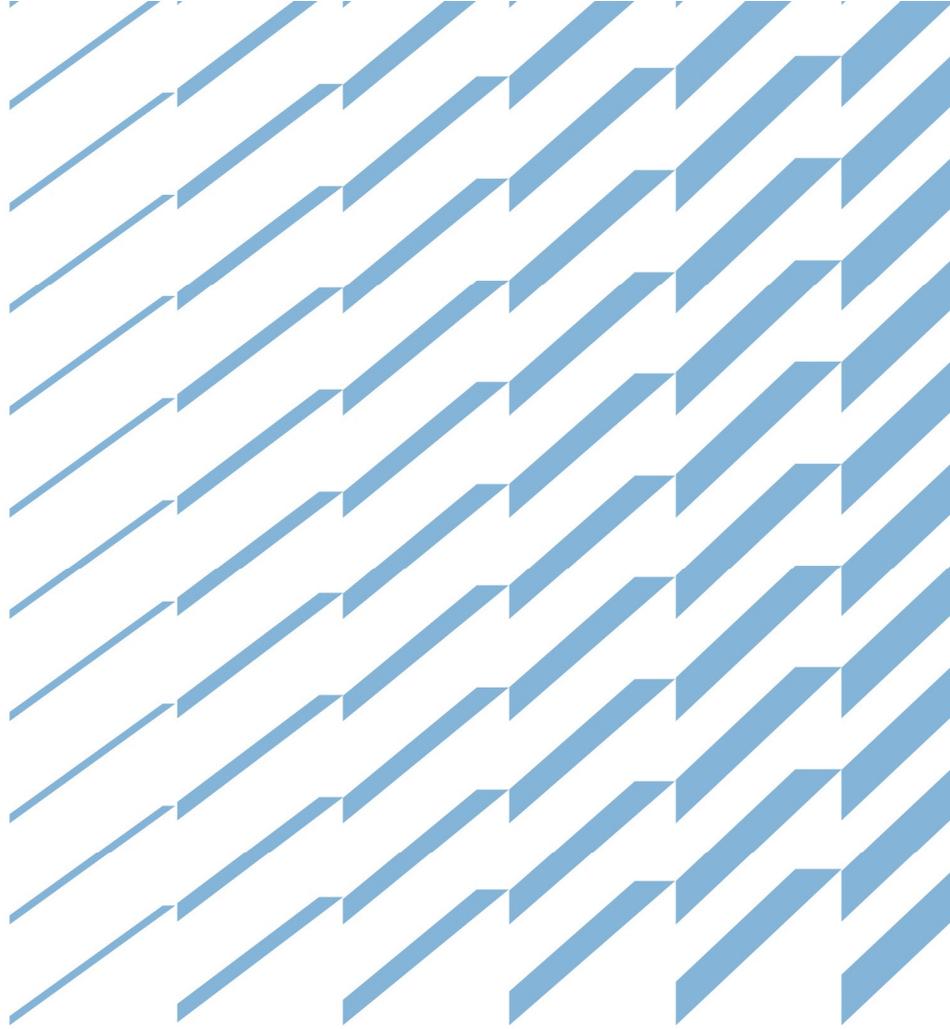
LIST OF TABLES

[표 3-2] 기회발전특구 후보 지역	62
[표 3-3]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별 검토 결과	78
[표 3-4] 투자기업 산업 분류별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80
[표 3-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20.12.8) 내용 중 생명산업 육성 관련 내용	83
[표 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20.12.8) 내용 중 전환산업 진흥 관련 내용	85
[표 3-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20.12.8) 내용 중 투자유치 관련 내용	87
[표 4-1] 기업 기본 현황	94
[표 4-2] 향후 5년 내 이전 의향 여부	95
[표 4-3] 기회발전특구 제도 인지 여부	96
[표 4-4] 기회발전특구 시행 시 이전 의향	97
[표 4-5]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에도 지방 이전 의향 없는 이유	97
[표 4-6]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 시, 주요 이전 사유	99
[표 4-7] 전라북도 특구 지정 시 이전 희망 지역	100
[표 4-8]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 시, 주요 이전 사유	101
[표 4-9]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 지원 사업 수요	102
[표 4-10] 원하는 지원제도/ 특례 확보 시 전북 기회발전특구 이전 의향	103
[표 4-11] 농생명바이오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107
[표 4-12]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109
[표 4-13] 이차전지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111
[표 4-14] 관광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112
[표 4-15] 드론 및 방위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112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7
[그림 2-1] 기회발전특구 추진 절차	11
[그림 2-2] 오바마 정부의 PZ와 트럼프 정부의 OZ 프로그램 비교	16
[그림 2-3] 지역 주요 자본 부족의 영향	17
[그림 2-4] 전국 및 전북 산업비중	24
[그림 2-5] 전국 및 전북의 세부 산업구조	25
[그림 2-6] 창업률('21년 기준)	26
[그림 2-7] 신생기업 5년간 생존율('20년 기준)	26
[그림 2-8] 전라북도 산업단지 현황도	29
[그림 2-9] 6대 혁신성장산업별 군집패턴	31
[그림 2-10] 6대 혁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유형화	32
[그림 2-11] 전라북도 대학 입지 현황	34
[그림 2-12] 전라북도 내 혁신기관 유형(좌)과 분포(우)	37
[그림 2-13] 전라북도 주요 특구 현황	38
[그림 2-14] 농생명바이오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45
[그림 2-15] 이차전지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46
[그림 2-16] 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48
[그림 2-17] 관광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49
[그림 2-18] 드론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50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체계	82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의 추천 체계
4.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으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함
-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새롭게 제시한 개념인 '기회발전특구'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국정과제 115번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

■ 과제목표 :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중화
- 과감한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 (파격 인센티브)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법인세 등 조세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등)
- (규제특례)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사후 요청시 신속 결정
- (기반조성)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 원스톱 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 (펀드조성)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20대 국정과제

- '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다수 있는 상황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만의 차별적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대전, 충남, 경북 등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을 유치 중임
 - 전라북도에서도 혁신 성장 산업 등 특화 산업을 대상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음

■ 전라북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발전경로 재구조화 등 전략적 관점에서 기회발전특구 유치가 필요함

- 수도권과 대도시권 중심 경제 체계가 심화되고, 기존 주력산업(자동차·조선)의 침체 등에 따라 광역시가 부재한 전북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증대됨
 - 전라북도의 인구 비중은 '00년 4.2%에서 '10년 3.7%, '22년 3.4%(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전라북도 GRDP 비중도 '00년 3.2%에서 '10년 2.8%, '22년 2.7%(통계청, 지역소득)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2년 28.1%(통계청, 지역소득)로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함
 - 전라북도 경제의 의존도가 높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17년 가동 중단되었고, '18년 한국GM 군산공장도 폐쇄됨에 따라 주력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며, 전국 스마트공장의 3.2%만이 전라북도에 입지하는 등 경제 전환 대응력이 낮은 실정임
- 침체국면에 진입한 전북 경제 발전경로의 변곡점을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 '22년 산업단지 생산액은 42.2조원으로 '12년부터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71.5억 달러로 '12년의 5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침체 및 쇠퇴 국면에 진입한 실정임

[표1-1] 전라북도 산업단지 추이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북형 기회발전특구의 내용 및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전북으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협약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23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해 취합·가공되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 사전조사를 통해 얻는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산업 여건, 투자기업 수요,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특화산업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 및 공간 구상과 전북형 기회발전특구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기회발전특구를 구성하는 특화산업, 투자환경, 특구인력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 및 연계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기본계획 작성에 활용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표1-2]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단계별 수행 내용

단계	수행 방식	주요 내용
사전조사	협약과제	- 입지 및 산업 관련 기본 자료 수집 - 앵커기업 조사 - 규제특례 수요 조사
구체화	정책과제	- 기회발전특구 입지 및 전략산업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별 경쟁력 분석 - 우선순위별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 도출
기본계획 작성	수탁과제	- 2024년 지정 목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 -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 기회발전특구 개발 및 관리 방식 -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 육성 전략 - 기회발전특구 지원 계획 -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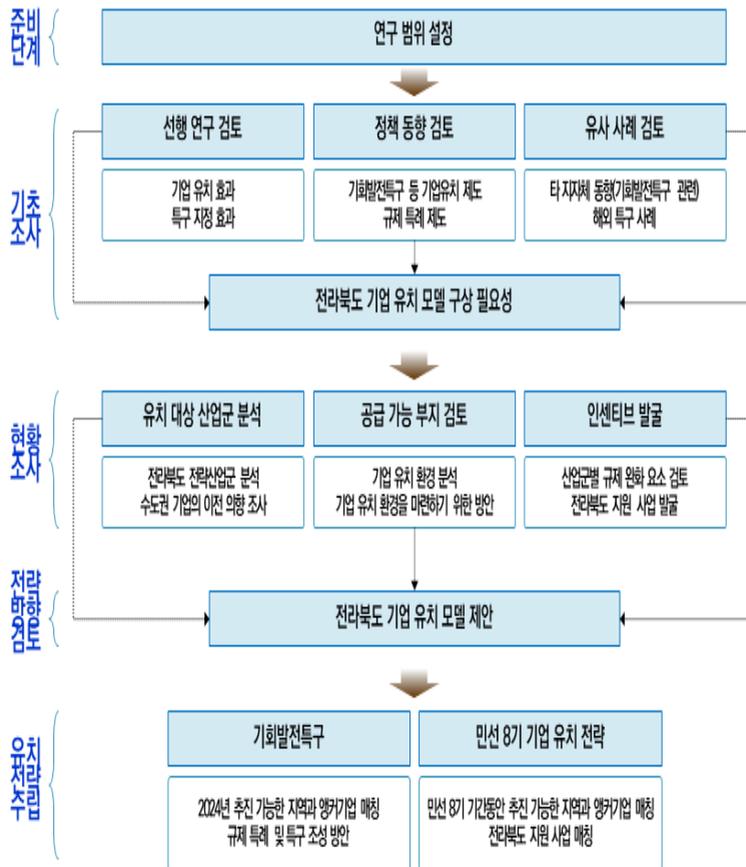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전라북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지역
- (시간적 범위) 2023년
- (검토 대상 기업) 수도권에 입지한 전라북도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 및 대기업

나. 주요 연구 내용

- **(기본 현황 분석)** 전라북도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정 가능 지역 현황, 투자 의향 기업(이하 앵커기업), 앵커기업 연계 전략산업 현황 등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도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 현황, 교육, 문화, 여가 등 정주환경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앵커기업의 투자 계획 내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해 앵커기업과 지역 사업간의 매칭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우선순위 선정)**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역과 타겟산업을 찾고 각각의 후보지별, 타겟산업별 평가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및 기업유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입지요인, 타겟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지 및 타겟산업과 매칭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한 기업유치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인센티브 발굴)** 수도권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발굴해 앵커기업 유치 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함
 -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이외의 전북에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안해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별 규제 특례 항목 발굴, 규제 특례 실현을 위한 제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전북형 모델 제시) 대안별 특화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공간 구상을 통해 기업과 산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전략산업에 맞춘 산업 및 기능 특화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내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앵커기업과 지역 소재 기업 및 산업단지 간 기능적 배분을 통해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연구의 추진 체계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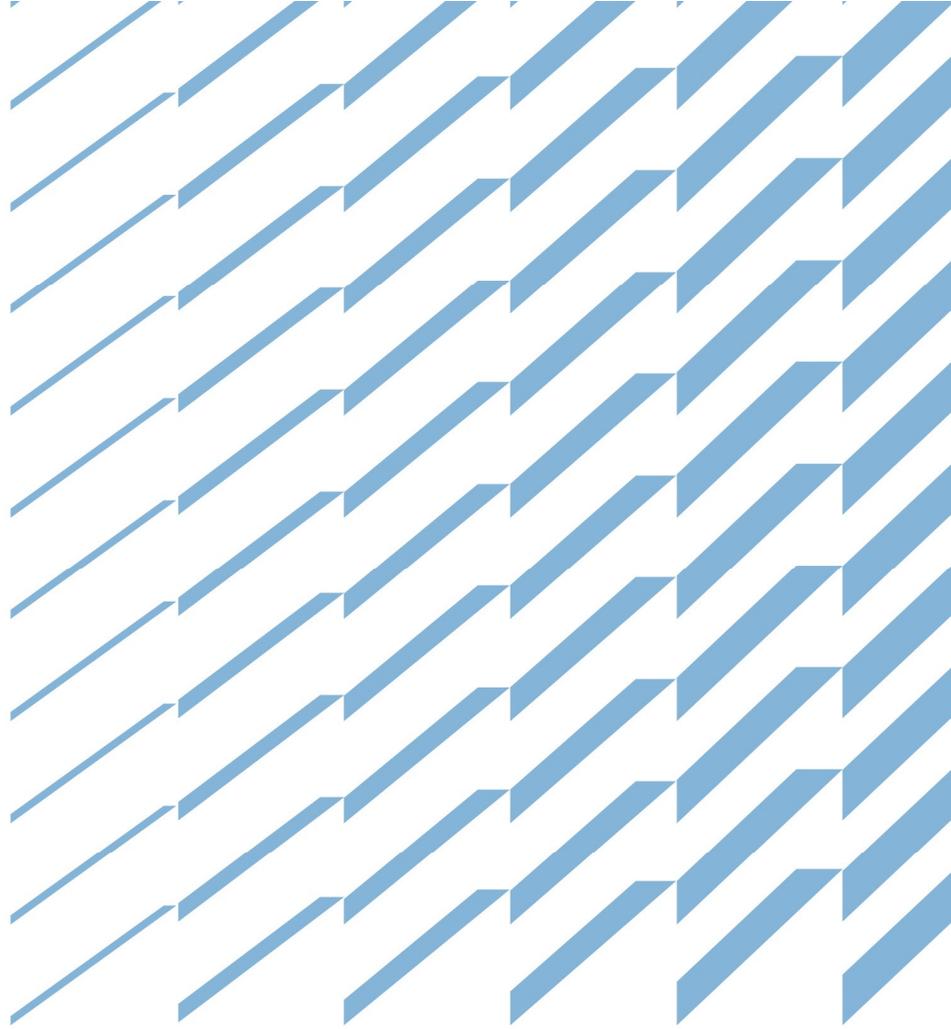
4. 연구 방법

가.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일반 현황 및 추진 가능 시점, 기업 수요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에 맞는 후보지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음
 -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1차 수요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시점에 따라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 조사를 수행함
 - 산업단지 이외 개별입지, 관광용지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 가능 시점과 기업 수요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였음
 - 기존에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과제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 확장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6대 혁신성장산업 및 사업 후보지와 연계되는 산업, 투자 의향 기업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였음
 - 이차전지 등 에너지신산업, 농생명 바이오산업, 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 등을 중심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후보 지역과 연계되는 산업, 사전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투자 의향 기업의 연관 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나. 전문가 자문

-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유사 특구와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기회발전특구 후보지역 평가에 반영함
- 기회발전특구 핵심과제와 연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참여하는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 전북지역사업평가단 구성원과 전략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함



제 2 장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현황 분석

1. 기회발전특구 개념 및 정책 동향
2. 전라북도 전략산업 여건 분석
3. 기회발전특구 후보지 검토



제2장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현황 분석

1. 기회발전특구 개념 및 정책 동향

가. 기회발전특구의 개념

- ‘기회발전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의미함
 -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 세제 및 교육 특구 관련 사항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구성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임
 - 기회발전특구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해 '23년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회발전특구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
 -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투자 기업과 협의하여 비수도권 지역과 민간 혜택의 재투자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부터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그림 2-1] 기회발전특구 추진 절차

-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브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의 인하

등이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주요 동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이 외에도 전라북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해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제한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2-1]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구분	세부내용
법인세 인하	·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구간별 세율 5% 인하
법인세 감면	· 수도권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10년간 법인세 100% 감면, 10년간 50% 추가감면
상속세 인하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500억~800억원 과세가액 공제(기존 300~600억원) -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소득세 인하	·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기업에서 근로하는 “지방근로자”에 대해 과세 구간별 세율 5% 인하
지방세 감면	·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 10년간 50% 추가감면

-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으로, 기업 유치 여부가 특구 지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재생(정주여건, 문화 환경 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 동력 확보 가능성도 중요한 지정 요건임

[표 2-2]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근로자 등의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 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할 것

-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차별적이고 경쟁력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타 지자체에서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혁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표 2-3] 타 지자체 기화발전특구 추진 방향

지역	특화산업	내용
대전	나노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 국가산단 연계
충북	바이오산업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정주 여건 개선
충남	에너지 분야, 국방산업	보령 탄소중립에너지 및 논산 국방산업 육성
대구	모빌리티·로봇·디지털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연계
경북·포항	2차전지산업	기업 연계 고용량 양극재 설계·제조·공정 기술개발
경남	원자력발전·항공우주·방위산업	지역 주력산업 연계한 기반시설 구축
부산	금융·전력반도체·2차전지	금융산업 집적지 확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연계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동향

- 지역균형발전은 1990년대 지방화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가 주요 정책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화 됨
 -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위상을 국정과제로 격상시켰고,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며 분산-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였음
 -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계획 수립, 기업도시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심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함
- 제2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향식 개발을 해왔던 기존 정책 추진 틀에서 벗어나 광역화된 지역을 특성화하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음
 - 광역화에 기반해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을 기본으로 한 3차원 공간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5+2 광역경제권별 특화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163개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교육·의료·복지·문화 분야별 선진국 평균수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였음
- 제3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저조한 점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기초생활권 단위의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광역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약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도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고, 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을 관장하기 위한 정책컨트롤타워 기능을 활성화 함
-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 특화발전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였음
- 분권, 포용, 혁신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발전적인 복원, 지역주도의 자립 성장기반 확보를 목표로 함
 - 사람, 공간, 산업에 대한 전략을 각각 마련하여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계획계약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였음

[표 2-4]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나타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비교

구분	제1차 계획 (2004~2008)	제2차 계획 (2009~2013)	제3차 계획 (2014~2018)	제4차 계획 (2018~2022)
주요 지역문제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심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한계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지역주민의 삶의질 체감 저조와 행복지수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저해
비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HOPE 프로젝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가치	균형발전	경쟁력	국민행복	분권, 포용, 혁신
전략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광역경제권 구축, 성장잠재력 확충 기초생활권 형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초광역권 개발구상, 개방-협력의 촉진 지방분권, 규제합리화, 지역주도의 상생발전	지역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균형발전지원체계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구분	제1차 계획 (2004~2008)	제2차 계획 (2009~2013)	제3차 계획 (2014~2018)	제4차 계획 (2018~2022)
주요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분산형 균형발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집중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특별회계 마련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 4+9지역전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광역경제권: 균형발전정책 축소와 지역경쟁력 강화 ·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복생활권: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주민체감도 제고 ·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 5개분야 21개 과제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여타면제)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추진 · 지역성장혁신계획 수립·지원 등

자료 : 국토연구원(2022), 국가균형발전3.0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pp 38, <표 2-6> 재구성.

-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23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함
- 기존 계획과 차별화하기 위해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과 산업 등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다. 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 사례

■ 미국 기회특구

- 미국 기회특구는 트럼프 정부 시기 추진된 제도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임
-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PZ(Promise Zones)가 강력한 중앙부처의 협업 지원, 연방 재원의 우선순위 부여, 국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지역 지원 정책이었다면, 기회특구는 세금 인센티브가 중심이 됨
- 기회특구 제도는 납세자가 자산 처분 시 처분 수익에 대한 세금 대신 처분 수익을 기회특구펀드에 5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세금을 큰 폭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펀드를 활용해 저소득 지역에 투자하는 제도임

Promise Zones(PZ)

- (개요)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Promise Zone 정책 추진 (오바마 정부)
- (자원내용) 지역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연계, 경제적인정성 확보, 교육기회 확장, 주거의 질 및 공공 안전성 향상 등 (연방정부 HUD 주관)
- (추진현황) 도심, 교외, 원주민 지역 등 3개의 유형으로 총 22개 선정(2014-2016년)
- (자원내용) 특구 지정 후 10년 간 세금 혜택 및 부채사업 우대 등 연방정부 차원의 종합 패키지 지원 (직접적 연방정부 예산지원 없음)
- LA의 경우 380억원의 연방정부 예산으로 교육+건강+ 복지서비스 종합 제공하는 커뮤니티스쿨, 일자리, 주거, 교통 인프라 등 통합지원 방식

< Promise Zone 지정현황 및 목표 >

Opportunity Zones(OZ)

- (개요)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OZ 선정 및 세금 혜택 제공 (트럼프 정부, 2017 Tax Cuts and Jobs Act)
- 민간 투자자에 세금 혜택을 통해 낙후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 (추진절차) 주정부에 의해 QOZ 선정, 연방정부 검토 후 승인 지원
- (지정현황) 총 8,764개 집계구 단위(Census tract, 약 4천명 인구 기준)로 QOZ(qualified opportunity zone) 선정
- (자원내용) Opportunity fund 에 투입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 유예(2026년까지), 5년 이상 펀드 투자 유지자금의 가치 상승(5년 후 10% 상승, 7년후 5% 상승), OZ에 10년 이상 투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미부과 등 획기적인 세금혜택 제공

* 정책 대상이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이 아니라, 투자자 위함이라는 비판 제기

자료 : 국토연구원(2022) pp.167. <표 4-11>

[그림 2-2] 오바마 정부의 PZ와 트럼프 정부의 OZ 프로그램 비교

-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며 기회특구 개혁안을 통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커뮤니티 혜택 제공 확대, 기회특구 이사회 내 커뮤니티 구성원 포함, 덜 낙후된 지역의 일몰 처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낙후지역 내 민간투자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양질의 고용 창출 등 지역발전 효과는 부족한 실정이며,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이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배제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다수 존재 함

■ 영국 레벨링업 어젠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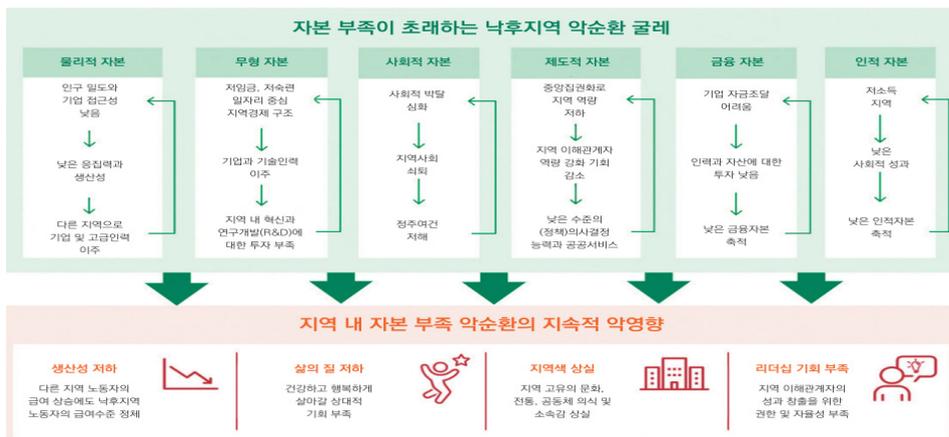
- 영국은 '20년대부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대공황 시기 급증한 실업률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어 포스트 브렉시트를 겪고 있는 지금까지 네 가지 패러다임에 의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첫 번째 패러다임은 대공황 시기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4년 「특별지역법」을 제정해 실업률이 높은 낙후지역의 산업입지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런던권 산업 확장으로 인해 격차 문제가 심화됨
- 두 번째 패러다임은 전후 「특별지역법」을 대체하기 위한 「산업분산법」을 기반으로 「도시 및 농촌계획법」과 함께 신규 공장 건설을 개발 지역으로 유도하는 중앙 주도 정책을 추진함

- 세 번째 패러다임에서는 도시재생에서의 인간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책의 초점을 물리적 재생에서 낙후 지역의 일자리와 고용, 교육 및 주택 등 통합적인 지역발전 정책 수단으로 확대하였음
- 네 번째 패러다임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며 정책 대상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전환하고, 시티딜 추진과 9개 연합정부 형성을 통해 분권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였음
- 네 가지 패러다임에 걸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포스트 브렉시트 시기에 대비한 레벨링업 정책이 대두되었음
 - 레벨링업 어젠다는 영국 특유 지역의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지역 안에서 주민 삶의 공간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총생산, 소득, 노동시장, 인프라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임
 - 레벨링업 정책을 통해 정부는 6개 자본(물리적, 인적, 무형, 재정적, 제도적)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고, 영국 전역의 생활 수준 향상, 공공서비스 강화, 공동체 강화, 지역 권한 확대 등 네 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표 2-5] 영국 레벨링업 자본별 주요 정책 방향

구분	주요내용
물리적 자본 (physical capital)	인프라스트럭처, 기계설비 및 주택
인적 자본 (human capital)	숙련도, 건강 및 노동력의 경험
무형 자본(intangible capital)	혁신, 아이디어와 특허
재정적 자본(financial capital)	기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자원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커뮤니티, 관계와 신뢰의 강도
제도적 자본(institutional capital)	지역 리더십, 역량과 기능성

자료 : HM Government(2022), 국토연구원(2022) pp.167. <표 4-11> 재인용.



자료 : 전봉경(2022). pp.8 <그림 4>

[그림 2-3] 지역 주요 자본 부족의 영향

[표 2-6] 영국의 레벨링업 영역과 정책 과제(미션)

중점 영역	2030년까지 정책 과제 (미션)
<p>■ 민간영역 성장을 통한 생산성, 임금, 일자리와 생활수준 향상(특히 낙후지역)</p>	
생활수준	- 영국 전역에서 고용, 임금,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시킨다.
연구개발(R&D)	- Greater South East지역 외 지역의 R&D 국내 공공투자가 적어도 40%까지 증대 -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혁신과 생산성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 투자를 최소 2배 이상 높이는 효과를 도모
교통 인프라	- 지역공공교통 접근성 개선, 서비스 향상 및 단순한 요금 체계, 편리한 환승 등 런던 수준과 유사하게 획기적으로 개선
디지털 연계성	- 대다수의 국민에게 5G 커버리지 제공, 전국적으로 기가бит-가능한 브로드밴드와 4G 통신망 구축
<p>■ 기회를 증진시키고 공공서비스 제공 향상(특히 낙후지역)</p>	
교육	- 읽기, 쓰기, 수학에서 기대 수준을 받는 초등학생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도록 함
숙련	- 영국 전역에서 고등교육 숙련을 완료하는 사람의 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도록 함
건강	- 지역 간 기대건강수명(HLE)의 차이를 줄이고, 2035년까지는 기대건강수명을 5년 정도 높임
웰빙	- 영국 전역에서 웰빙 수준을 향상시키고, 최상-최하 지역 간 웰빙 격차를 축소시킴
<p>■ 커뮤니티의식 회복, 지역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p>	
지역 자긍심	- 영국 전역에서 도심생활 만족도와 지역문화, 커뮤니티 참여 등 지역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도록 함
주택	- 최초 생애주택구입자수와 자가 주택보유를 위한 경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주거 수준 미달 주택수를 50%까지 감축 희망
범죄	- 살인, 폭력, 근린범죄를 획기적으로 축소, 특히 위험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축소
<p>■ 지역 리더 및 커뮤니티 역량과 권한 강화</p>	
지역 리더십	- 잉글랜드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권한과 함께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추진 또는 단순화된 기금(펀드) 운영과 높은 수준의 지방이양을 추진

자료 : HM Government(2022), 국토연구원(2022) pp.168. <표 4-12> 재인용.

■ 프랑스 국토연계청 지역격차 해소 정책

- 파리와 주변 일드프랑스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한 프랑스에서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60년대부터 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며, 4단계에 걸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고 지방행정체제도 함께 대편하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수행하였음
- 균형발전정책은 기초지자체인 코뮌과 코뮌 간 연계협력체인 코뮌 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 르네상스와 농촌활성화 정책, 국토연계청의 지역격차 해소 사업이 추진 중임
 - 국토연계청에서는 중소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도시 정책, 소규모 코뮌 거주자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내일의 소도시 정책, 공공서비스 전산화, 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산업지역 정책 등을 추진 중임

라. 지역 상생형일자리 추진 사례

1) 광주광역시

■ 개요

- 광주 내 산업여건과 기업의 고용 여력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유출되는 청년인구를 정착시키고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유치함
 -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지역 기업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현대자동차가 생산 위탁, 판매 및 신설법인 대상 기술 지원을 수행하였음
 - 경형 SUV를 연 10만대 생산하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

■ 특징

- (주)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여 경형 SUV를 생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통합형·연대형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여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통·투명경영 체계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현황

'19. 1.	·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전담팀 구성
'19. 9.	·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완료
'19. 11.	· 완성차 위탁생산 및 공급을 위한 업무지원 계약 체결
'19. 12.	·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 · 직원 순차적 채용
'20. 6.	·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1. 4.	·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
'21. 9.	· 설비 시운전(~'21.9.) 및 양산('21. 9.~)

■ 상생요소

참여주체	주요역할
노	· 협력적 노사상생모델 구축 및 갈등의 예방과 조정 · 숙련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적극 참여 등
사	· 적정 노동시간의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 고용안정 보장
민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협약 지속가능성 담보 ·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갈등 사전 예방 및 중재
정	· 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 · 근로자에게 공동복지프로그램 제공

2) 경상남도 밀양시

■ 개요

-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 분야의 노사민정 상생으로 고용과 투자를 창출함
 -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초 제조공정기술을 활용한 주력제조업 경쟁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나, 주민과의 환경갈등 등에 따른 입지 불안정, 근로환경이 열악해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 특징

- 친환경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3D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뿌리산업은 ACE(Automatic, Clean, Easy) 산업으로 혁신함
- 주민상생기금 조성, 환경설비 의무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고, 원·하청 기업 간 납품 단가 연동제 준수, 납품 물량 보증 및 확대 등 동반성장을 추진함

■ 추진현황

'19. 6.	·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협약
'20. 8.	· 추가 상생협약
'20. 10.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 직원 순차적 채용
'21. 6.	· 한영금속 준공

■ 상생요소

참여주체	주요역할
노	· 생산성 향상 노력 · 노사상생협력
사	· 지역주민 우선 고용창출 · 스마트 친환경설비 투자 · 적정임금 보장
민	· 상생협약 지속노력 · 환경 갈등 최소화
정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주민,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
대기업	· 납품단가 연동제 준수 등 공정거래 유지 · 납품물량 보증 및 금융지원 등 동반성장 노력

3) 경상북도 구미시

■ 개요

- LG화학의 자회사인 LG BCM(Battery Core Material)을 설립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첨단소재산업의 생산 거점 마련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특징

- (미래신산업 투자)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이 큰 첨단소재 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경북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함
- (노사민정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이차전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 노사민정 간 장기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

■ 추진현황

'19. 6.	· 경북도/구미시, LG화학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 제안
'19. 7. 25.	·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 체결
'20. 1.	· 「상생형 구미일자리」실무추진단 운영(4개반 30명) · 상생일자리 협의체 운영
'20. 4. 28.	· 코로나19 극복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
'21. 11. 10.	· 구미 상생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및 투자협약 체결 · 구미지역 4개교(금오공대, 폴리텍대 등)와 업무협약 체결

■ 상생요소

참여주체	주요역할
노	·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 ESG 경영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보건, 안전환경 등) · 직무능력 향상 훈련 이수 등 생산성향상 노력
사	· 지역인재 채용 등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 활성화 · 원·하청 협력(협력 기업에 납품 물량 보증, 안전설비·분석장비 지원) · 산단내 기업 ESG 펀드 및 상생협력기금 조성

참여주체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펀드(100억원) : LG화학이 협력사에게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 * 상생협력기금(60억원) : LG BCM, 지자체 공동 조성(각 30억원), 생산성 컨설팅 및 안전 지원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 노력 ·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부지 50년 무상제공(지방비 110억원), · 상생협력기금 조성(지방비 30억원)

2. 전라북도 전략산업 여건 분석

가.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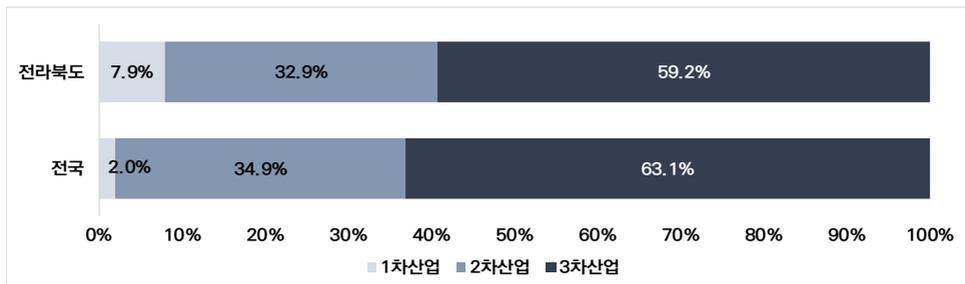
■ 전라북도 산업구조

- 2021년 지역총부가가치 기준 전국 대비 전북의 비중은 1차 산업이 약 10.5%를 차지하며, 2차·3차 산업은 각각 전국 대비 각각 2.6%, 2.5%에 불과한 상황임

[표 2-기] 지역 내 산업구조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차 산업	전국	31.60	32.20	33.23	32.37	33.98	33.22	31.99	34.09	38.54
	전북	3.59	3.64	3.68	3.53	3.72	3.59	3.41	3.55	4.06
	전국대비 비중	11.4%	11.3%	11.1%	10.9%	11.0%	10.8%	10.7%	10.4%	10.5%
2차 산업	전국	509.96	524.90	557.27	587.23	627.92	635.19	617.70	619.31	662.72
	전북	14.93	15.46	15.96	15.63	15.74	15.84	15.78	15.88	16.90
	전국대비 비중	2.9%	2.9%	2.9%	2.7%	2.5%	2.5%	2.6%	2.6%	2.6%
3차 산업	전국	839.84	880.53	933.11	976.15	1021.57	1071.89	1115.71	1122.40	1,197.56
	전북	22.06	23.05	24.01	25.20	26.28	27.41	28.76	28.98	30.37
	전국대비 비중	2.6%	2.6%	2.6%	2.6%	2.6%	2.6%	2.6%	2.6%	2.5%

* 주 : (산업구분) 1차산업 - 농업·농림업 및 어업/ 2차산업 - 광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건설업/ 3차 산업 -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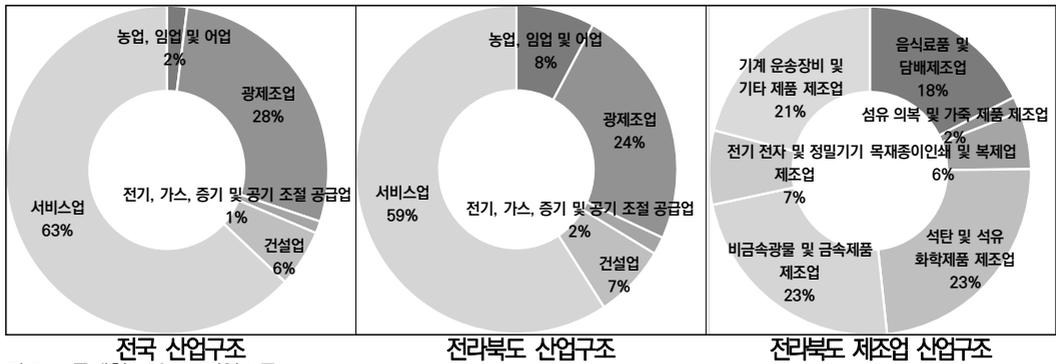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1 지역소득

[그림 2-4] 전국 및 전북 산업비중

-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3차산업이 약 63.1%의 비중을 차지하며, 연평균 4.1%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 2차산업은 34.9%(연평균 1.6%), 1차산업은 7.9%(연평균 1.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산업구조보다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5.90%p)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가짐

- 2021년 GRDP 기준 전국의 광제조업 비중은 약 28%이며, 전북의 제조업 비중은 약 24%를 차지하는 등 전국 비중보다 전라북도의 광제조업 비중이 낮은 편임
- 전북 제조업은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23.5%),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23.4%),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21.0%),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17.6%) 순으로 구성됨



자료 : 통계청, 2021 지역소득

[그림 2-5] 전국 및 전북의 세부 산업구조

- 4개 분야(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에 전체 고용의 46.6%, 사업체의 53.4% 차지하는 등 특정업종에 대한 산업의존도가 높은 편임

[표 2-8] 산업별 사업체수·종사자 수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수	
		업체 수	비율	인원	비율
전체산업		231,380	100.0	791,096	100.0
상위 4개 업종	소 계	123,474	53.4	368,834	46.6
	제조업	16,384	7.1	121,697	15.4
	도매 및 소매업	53,139	23.0	105,497	13.3
	숙박 및 음식점업	31,328	13.5	69,834	8.8
	건설업	22,623	9.8	71,806	9.1

자료 : 통계청, 「전라북도 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 전라북도의 창업률은 2021년 기준 14.2%로 전국평균(14.5%)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5년 간 기업생존율은 34.8%로 전국평균(33.8%) 보다 높게 나타남

[표 2-9] 신생기업 생존율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4년간 증감률
신생기업수 (개인+법인)(개)	전북	28,463	33,252	35,752	33,103	16.3%
	전국	919,752	996,779	1,058,842	1,022,439	11.1%
신생기업 5년간 생존율	전북	31.3%	33.9%	34.8%		1.0%p
	전국	31.2%	32.1%	33.8%		1.7%p



[그림 2-6] 창업률('21년 기준)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업생멸 행정통계

[그림 2-7] 신생기업 5년간 생존율('20년 기준)

■ 산업별 취업자 현황

- 2021년 취업자 수는 972천 명으로 2017년 대비 37천 명이 늘어났으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930천 명선을 유지하다 202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취업자수가 증가한 산업은 농업·임업·어업, 건설업 등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천 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반면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취업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며, 이 중 교육 서비스업은 14천 명이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표 2-10] 전라북도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산업별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 증감량
계	935	933	933	956	972	37
농업, 임업 및 어업	160	172	180	187	174	14
광업	0	0	1	1	0	0
제조업	127	123	115	115	123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	2	2	3	2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	5	5	5	5	0
건설업	63	82	80	77	73	10
도매 및 소매업	95	93	91	88	101	6
운수 및 창고업	45	38	41	42	43	-2
숙박 및 음식점업	70	64	67	62	77	7
정보통신업	11	13	12	11	9	-2
금융 및 보험업	34	24	22	25	24	-10
부동산업	14	14	15	14	13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19	17	19	20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	19	23	23	25	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9	60	52	52	50	-9
교육 서비스업	77	70	66	66	63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0	84	86	108	114	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14	15	12	12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	39	42	42	41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1	2	2	1	1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0	1	1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 산업단지 현황

- 2023년 기준 전라북도에는 총 90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6개소, 일반산업단지는 23개소, 농공단지는 60개소가 입주하고 있으나 이 중 노후 산업단지가 52.2%(47개)에 달하는 등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진행 중임
- 전라북도 내에서도 산업 입지 측면에서는 서북부 5개 시군에 사업체 73.9%, 종사자 77.1%, 산업단지 90.9%가 집중되는 등 불균형이 존재하며, 노후산업단지 비중이 50%에 달하는 등 노후화 된 실정임

(평균년수: 국가 21년, 일반 14년, 농공 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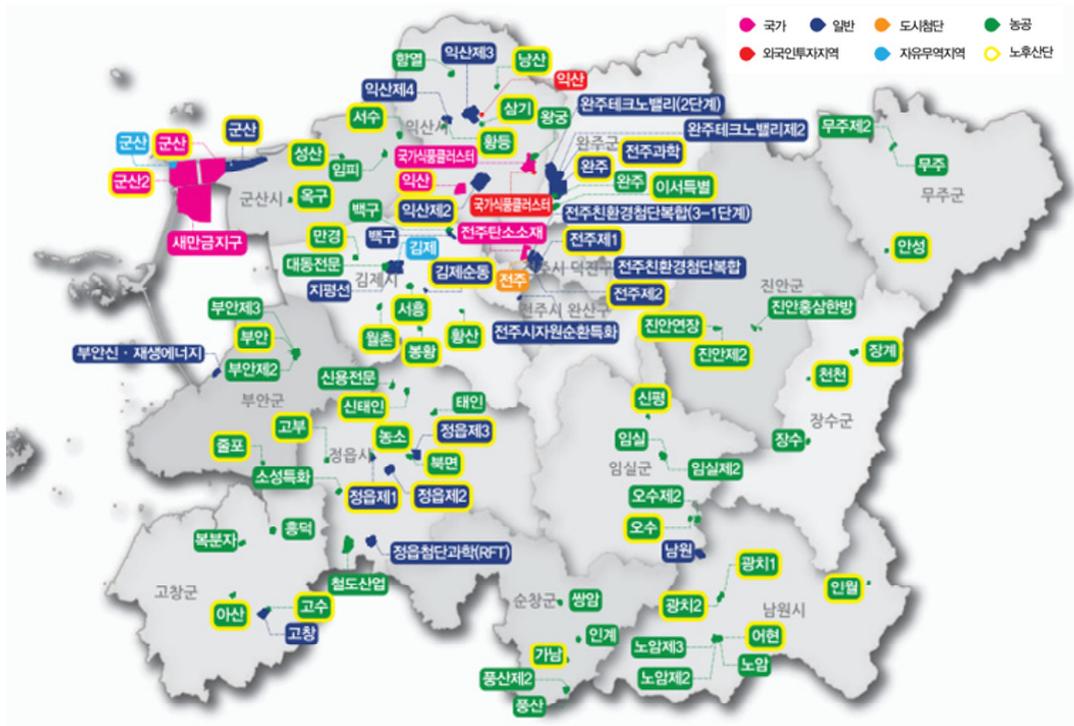
- 자유무역지역은 군산과 김제 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한 익산에 지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는 저렴한 토지가격과 우수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어 투자환경에서 강점을 보이나 서북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열악한 산업 공간의 한계가 공존
- 전라북도 공업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07.9천원으로 전국 17위에 해당하며,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통해 항만·공항·철도가 추가될 예정임(2027년 예정)

[표 2-11]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산업단지
국가 (6)	군산(3)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구:군장), 새만금지구
	익산(2)	익산국가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1)	탄소소재
일반 (23)	고창(1)	고창일반산업단지
	군산(1)	군산일반산업단지
	김제(3)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김제백구일반산업단지
	남원(1)	남원일반산업단지
	부안(1)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완주(4)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2단계)
	익산(3)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전주(5)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1단계), 전주시지원순환특화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단계),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정읍(4)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도립	전주(1)
농공 (60)	고창(4)	고수농공단지, 북분자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 흥덕농공단지
	군산(4)	서수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옥구농공단지, 임피농공단지
	김제(7)	대동전문농공단지, 만경농공단지, 백구농공단지, 봉황농공단지, 서흥농공단지, 월촌농공단지, 황산농공단지
	남원(7)	광치1농공단지, 광치2농공단지, 노암농공단지, 노암제2농공단지, 노암제3농공단지, 어현농공단지, 인월농공단지
	무주(3)	안성농공단지, 무주농공단지, 무주제2농공단지
	부안(4)	출포농공단지, 부안농공단지, 부안제2농공단지, 부안제3농공단지
	순창(5)	가남농공단지, 쌍암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풍산농공단지, 풍산제2농공단지

구분	지역	산업단지
	완주(2)	이서특별농공단지, 낭산농공단지
	익산(5)	삼기농공단지, 왕궁농공단지, 합열농공단지, 황등농공단지, 낭산농공단지
	임실(5)	신평농공단지, 오수농공단지, 임실농공단지, 임실제2농공단지, 오수제2농공단지
	장수(3)	장계농공단지, 천천농공단지, 장수농공단지
	정읍(8)	고부농공단지, 농소농공단지, 북면농공단지, 신용전문농공단지, 신태인농공단지, 태인농공단지, 소성특화농공단지, 철도산업농공단지(조성중)
	진안(3)	진안연장농공단지, 진안제2농공단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자유무역	군산, 김제	
기타	외국인 투자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3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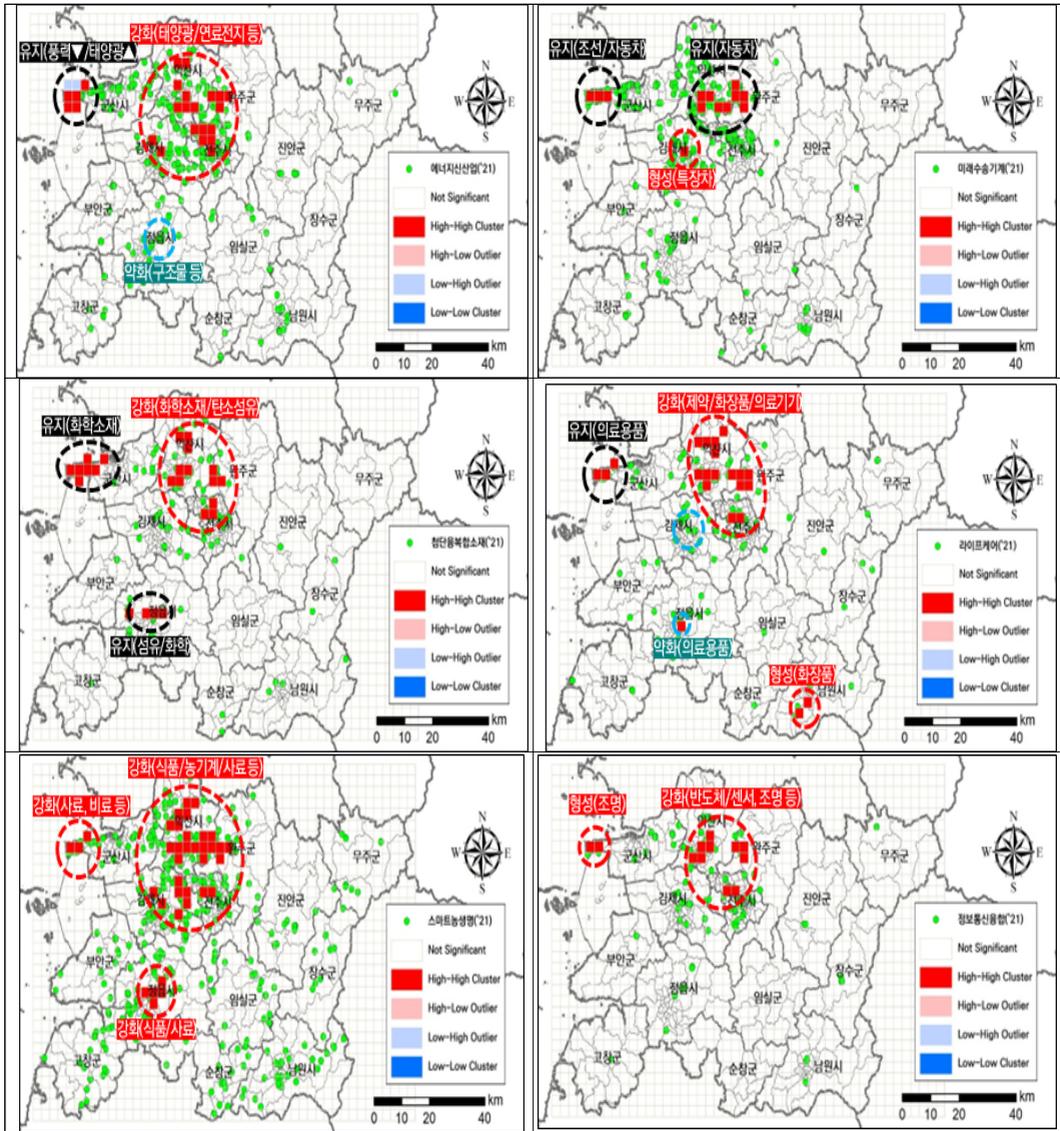


[그림 2-8] 전라북도 산업단지 현황도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3 전국·시도별 전국산업단지 현황지도, 23쪽

■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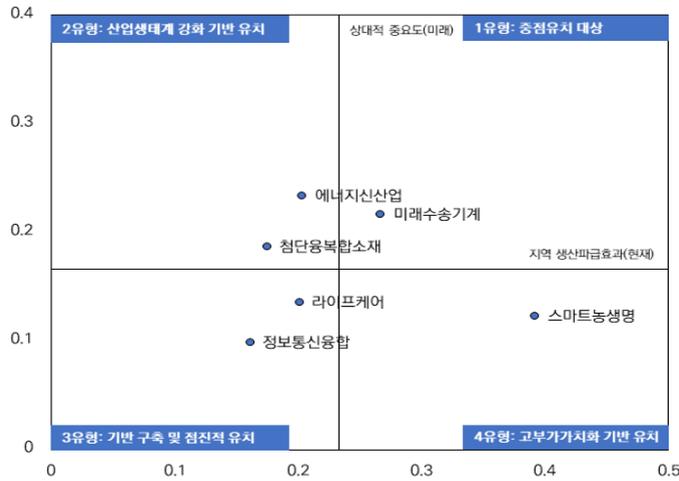
-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중점으로 육성하는 산업군으로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산업이 해당됨
- 전북 6대 혁신성장산업은 전국 비중과 성장률이 높고, 미래수송기계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정보통신융합의 성장률이 가장 높음
 - 6대 혁신성장산업은 전국 대비 3.8%이며, 이외의 산업은 3.5%(등록공장 종업원 기준, '21)을 차지하며, 연평균성장률도 6대 혁신성장산업은 전국의 3.4%, 이외의 산업은 0.4%(등록공장 종업원 기준, '10-'21)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미래수송(45.6%), 에너지신산업(16.3%), 스마트농생명(12.3%) 순으로 나타나며,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은 정보통신융합(17.6%), 스마트농생명(7.6%), 라이프케어(5.9%) 순으로 나타남
- 6대 혁신성장산업은 전주권 집중이 강화하는 가운데, 산업별로 공간적인 집적패턴은 차이를 나타냄(전북연구원, 2022)
 -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연료전지·이차전지 중심으로 전주권 군집이 강화(전주·완주·익산)되고 있으며, 미래수송기계 분야에서는 수송부문 침체로 완성차·조선소 소재지 약화, 김제 군집이 특징차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 추세를 보임
 - 첨단융복합소재 분야에서는 화학소재·탄소섬유 중심으로 전주권 군집이 강화(전주·완주·익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라이프케어 부문에서는 의료기기·화장품·제약을 중심으로 전주권과 남원 군집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스마트농생명 분야에서는 사료·농기계·사료 중심으로 전주권, 군산, 정읍 군집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융합 분야에서도 반도체·센서·조명 중심으로 도시적 특성이 강한 익산, 전주, 군산에서 강화되고 있음
-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대기업 투자유치 중요도는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순으로 나타남(전북연구원, 2022)
 - 지역 생산유발효과는 스마트농생명(0.392), 미래수송기계(0.267), 에너지신산업(0.203)의 순이며, 투자유치 중요도는 에너지신산업(0.234), 미래수송기계(0.217), 첨단융복합소재(0.187) 순으로 나타남



자료 : 전북연구원(2022).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입지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 발전체계 구축 필요.

[그림 2-9] 6대 혁신성장산업별 군집패턴

- 지역 내 혁신성장산업 별 혁신자원은 연구 지원기관을 비롯해 기업, 대학 등 전라북도 내 역량이 확보된 실정으로 관련 앵커기업 유치 시 연계 효과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전북연구원, 2023)



자료 : 전북연구원(2023), 전라북도 대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탐색연구

[그림 2-10] 6대 혁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유형화

[표 2-12]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별 혁신자원 분포

구분	[신] 주요기업	[학] 대학	[연] 연구·지원기관
에너지 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씨에스윈드(풍력구조물) (주)솔라파크코리아(태양광) 휴먼컴퍼지트(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 자원·에너지공학과 우석대 수소연료전지센터 군산대 풍력에너지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소융합 검사지원센터 한국재료연구원(풍력시험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미래 수송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중공업(조선) 현대자동차(자동차) (주)호룡(특장차) 현대두산인프라코어(건설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 기계시스템공학부 원광대 스마트자동차공학과 우석대 전기자동차공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 융복합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성첨단소재(탄소섬유) 동우화인켐(무기화합소재) 한솔케미칼(무기화합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 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원광대 탄소융합공학과 전주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ECO융합섬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첨단방사선)
라이프 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더스제약(의약품) (주)코빅스(화장품) (주)풍림파마텍(의료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 바이오펜디컬공학부 원광대 한약학과 우석대 제약공학과·한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식품연구원 남원사회장품산업지원센터 전북대 의료기기 지원센터
스마트 농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하림산업(조미료 등) (주)농협사료(배합사료) 씨제이생물자원(동물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원광대 식품생명공학과 전주대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
정보통신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전자(반도체/광소자) 알에프세미(반도체/센서) 웰스라이팅(전기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 반도체과학, SW공학 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조명ICT연구원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전북콘텐츠산업진흥원

자료 : 전북연구원(2023), 전라북도 대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탐색연구

■ 혁신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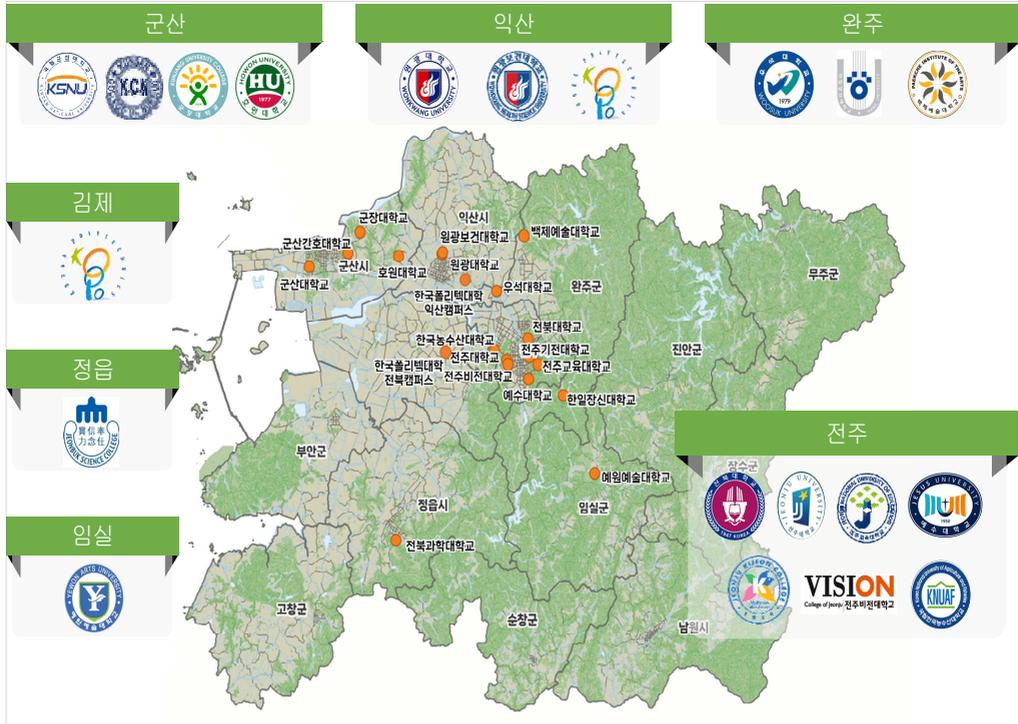
- (공공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를 포함한 중앙공공기관이 14개, 전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7개, 농협은행 전북본부 등 금융기관이 2개로서 총 23개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표 2-13]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직무(직렬)
중앙 공공기관 및 전북본부 (지사) (14개)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지적측량/공간정보/국토조사) 사무(기획행정/행정회계)
	한국전기안전공사	일반행정, 전기, 비파괴, 기계,
	국민연금공단	일반직(사무직/사회복지직/심사직/전산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행정(출판·독서진흥업무/기타행정)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마케팅, 재무/회계관리, 정보보안, 자원개발, 설비건설(보전), 설비공정/기술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관리, 정보시스템운영개발 기술분야(검사점검-화공, 기계, 안전공학)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행정, 토목, 건축, 전기, 조경, 기계, 설비, 전산, 전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사무, 송배전, 통신, IT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사무영업, IT, 디자인, 외국어, 빅데이터, 차량, 토목, 전기통신, PCB, 전자차량, 첨단제어, 통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건설시공, 계획개발, 사업기획, 설계발주, 유지관리, 경영사무, 사업관리, 재무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사무직(경영/경제/회계, 행정/법, 통계, 인문/사회/홍보) 기술직(기계, 전기/전자, 화공/환경, 건축, 전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금속, 기계, 회계, 섬유화학, 외국어특기, 정전기전자, 전산, 조사연구, 채권관리, 금융공학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행정, 법무행정, 정보기술,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기계, 전기, 전자통신, 토목, 행정, 환경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7개)	전북개발공사	행정, 연구직
	전북연구원	사무직(통계/비서), 연구직
	전북테크노파크	사무직(회계/경영/기획/마케팅)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 경영지원관리, 창업컨설턴트, 직업상담, 재무/회계관리, 마케팅, 통역, 행정, 교육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술(자동차공학/엔진/전장정비), 기계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행정, 연구직
	전북신용보증재단	행정, 금융, 사무(회계/경영)
금융 (2개)	농협은행 전북본부	행정, 금융(상담/컨설팅), 사무(회계/경영)
	전북은행	행정, 금융, 사무(회계/경영)

자료 : 전라북도청 내부자료(2022)

- (대학)전라북도 내에는 종합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0개교 등 총 20개 대학이 본교 형태로 입지하고 있으며, 학부 기준 총 재학생 수는 87,285명, 전임교원은 3,689명임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2023)

[그림 2-11] 전라북도 대학 입지 현황

- 전라북도 지역 대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되어 있으나, 특히 전라북도 주력산업과 미래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은 지역 주력 산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해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분야와 미래신산업 분야인 수전해 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가 진행되어 관련 인재를 양성 중에 있음
 - 이 외에도 전통문화 교육, 라이프케어 등 지역 정주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특성화가 진행 중임

[표 2-14] 대학별 특성화 분야 및 관련 학과 현황

대학명	특성화 분야	특성화 세부분야
전주교육대학교	전통문화교육	전통음악교육, 전통공계교육, 한복문화체험교육
군산간호대학교	심뇌혈관 케어 선도대학	BLS의료인양성과정, 보건교사양성과정
전북과학대학교	보건의료	보건의료양성
	호텔조리, 관광	조리, 관광인력양성
	농생명바이오	천연물가공, 분석
전북대학교	전기, 전자	전기인력양성
	방위산업	방위산업 전문분야
	에너지신산업	2차전지, 수소, 재생에너지 등
전주기전대학교	디지털농업	스마트팜, 푸드테크, 디지털농업 등
	탄소산업	탄소복합소재, 탄소전자 등
	농생명	스마트팜, 말산업, 반려동물, 동식물, 펫바이오
원광대학교	한식·문화	식품산업, 문화관광
	바이오, 헬스케어, 보건분야	보건복지, 헬스케어
호원대	농생명	농생명·식품, 바이오식품, 스마트팜
	ICT융합	자동차·조선해양·기계, ICT·SW융복합, 탄소방사선융복합 친환경자동차, 스마트그린 석유화학·반, 사물인터넷, 디지털콘텐츠
	반려동물산업	반려동물 건강관리, 반려동물창업
백제예술대학교	K-Culture 창의 융합인재	음식, 미용예술, 문화, 관광
	보건복지 융합인재	보건, 사회안전
전주대학교	공연예술	보컬, 실용댄스, 기획A/R, 뮤지컬, 테크놀로지, 미디어 작, 편곡, 합창, 프로듀싱, 기악
	문화·관광	크리에이티브, 문화관광, 문화콘텐츠
	탄소융합에너지	탄소융합소재, 미래에너지, 차세대모빌리티
예수대학교	농생명식품	첨단농업, 메디푸드등식품, 농생명바이오
예수대학교	보건	간호
군장대학교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시공, 2차전지 장비운용
	미래수송기계	특장차
	보건의료, 복지케어	실버의료케어, 헬스케어 사회복지
군산대학교	에너지신산업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등)
	미래수송기계	친환경미래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SW, 특수목적수송기기
	농생명바이오	디지털농업, 푸드테크, 메디컬바이오
전주비전대학교	지역성장 동력산업	자동차·기계, 녹색에너지, 융복합소재
	실버헬스케어	간호, 물리치료, 병원행정, 응급구조, 치위생, 미용건강, 인문사회
우석대학교	디지털 휴먼케어	바이오헬스, 커뮤니티케어
	스마트 휴먼테크	안전/인공지능, 수소/모빌리티

자료 : 전라북도(2023), 전라북도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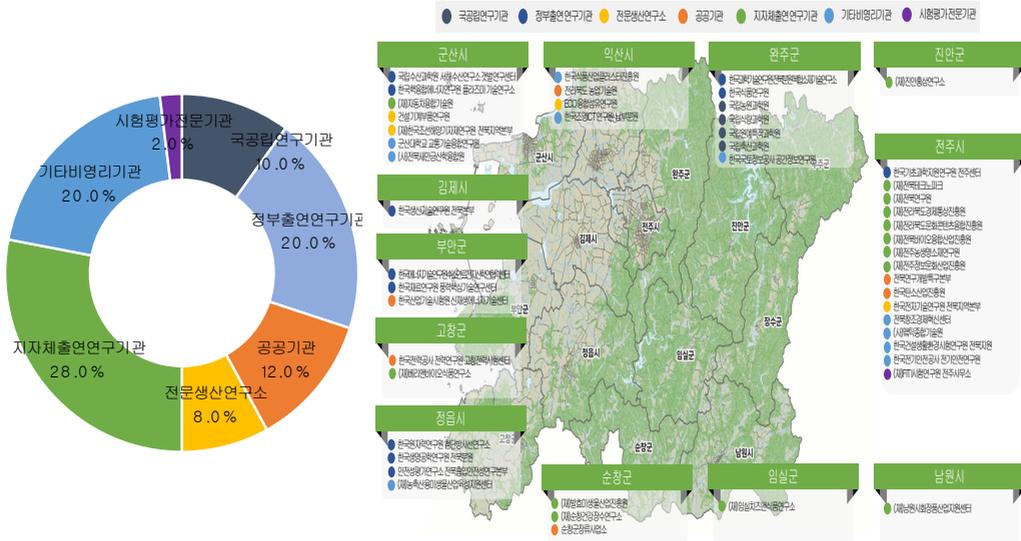
- (연구기관) 전라북도 지역 산업은 공공부문 혁신 인프라 우수,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 등 강점과 영세한 산업 규모, 민간부문 혁신역량 부족의 한계가 공존하고 있음
 - 공공부문 혁신인프라로는 국·공립연구기관 11개(전국 1위),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정,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14개 등 총 50개가 존재함
- 전라북도에 본원을 두고 있는 국가혁신기관은 총 10개소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국가혁신기관 본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 본원 8개소 등 총 11개소가 해당함
- 전라북도 출연 혁신기관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순창군장류사업소, 진안홍삼연구소 등 시군혁신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15] 국공립 연구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국가혁신기관 본원 (10)	전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군산	국가해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완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국립수목원
국가혁신기관 분원 (11)	전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군산	국립수목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
	정읍	안전생태기연구소, 전북흡입안전생연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완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부안	한국기계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신기술협력센터
고창	한국전력고장진력시험센터	
전라북도 혁신기관 (7)	전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연구원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
	익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군 혁신기관 (8)	전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순창	순창군간강장류연구소, 순창군장류사업소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남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임실	임실차즈기식품연구소

구분	기관명	
기타혁신기관 본원 (9)	진안	진안홍삼연구소
	전주	캠텍종합기술원 FIT시험연구원 전주사무소
	군산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군산대 기술혁신센터, 전북사민금산학융합원
	익산	ECO융합습유연구원
	완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읍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기타혁신기관 분원 (5)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군산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전북본부
	익산	한국조명CT연구원
	부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자료 : 전북테크노파크(<https://rnd.jbtp.or.kr>) - 전북혁신지원



자료 : 전라북도(2023), 전라북도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그림 2-12] 전라북도 내 혁신기관 유형(좌)과 분포(우)

- (특구지정현황)전라북도에는 2개의 규제특구, 4개의 연구개발특구, 1개의 투자진흥특구 등 총 7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 전주시와 혁신도시의 사업화촉진지구 연구개발특구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고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을 연계하여 벤처창업, 탄소소재 연구 및 생산거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기관이 입주함
 - 완주군의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에는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 등 융복합 소재부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을 수행하는 전주과학연구단지 등이 입주함
 - 정읍시의 농생명융합거점지구에는 농생명 융합 분야에서 연구와 생산의 거점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이 입주하고 있음
 - 군산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핵융합연구원 등이 입주하고 있음
 - 군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는 LNG 이격거리,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 초소형 전기특수차 주행 등의 특례가 적용됨
 -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탄소융복합 분야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선박 건조 실증,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제작,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실증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이차전지 및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 감면, 법인 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자료 : 양원탁(2023),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의 특성과 기회발전특구 조성 방향 설정

[그림 2-13] 전라북도 주요 특구 현황

나. 기회발전특구 산업 현황

1) 기회발전특구 주력 산업군 선정

■ 최근 3년간 전라북도 투자기업 현황

- 전라북도 기회발전특구 주력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이미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최근 전라북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군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표 2-16] 최근 3년간 산업별 전라북도 투자기업 MOU체결 건수

산업 분류	2021년	2022년	2023년	최근 3년 합계
식품 제조업	32	22	14	68
섬유제품 제조업	2	0	0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	6	9	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	1	0	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0	0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1	1	5
1차 금속 제조업	5	0	3	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6	3	2	1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4	1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1	1	5
전기장비 제조업	12	12	10	3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4	4	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	7	3	32
기타 제품 제조업	0	1	0	1
도매 및 소매업	1	0	0	1
운수 및 창고업	0	0	2	2
숙박 및 음식점업	0	1	1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1	2
합계	107	63	52	222

- 최근 3년간 산업별 전라북도 투자기업 MOU체결 건수 현황¹⁾을 보면 식품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전기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남

1) MOU체결이 바로 전라북도 유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 입장에서 전라북도의 투자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사용함

- 전기장비의 경우 세분류로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이차전지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자동차 부품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주된 상품을 보면 이차전지를 위한 원재료 생산 뿐만 아니라 화장품 및 의약을 위한 화학물질 생산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투자 현황을 봤을 때,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면 기 유치한 기업과의 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고용규모를 보면 전기장비 제조업의 고용 규모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차전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표 2-17] 최근 3년간 산업별 전라북도 투자기업 MOU체결 고용규모

산업 분류	2021년	2022년	2023년	최근 3년 합계
식품 제조업	1,408	1,046	770	3,224
섬유제품 제조업	127	0	0	1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63	882	2,040	3,28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	70	0	7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5	0	0	19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2	20	24	226
1차 금속 제조업	151	0	71	22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65	42	60	267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1	123	33	29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66	110	51	427
전기장비 제조업	2,093	923	3,880	6,89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	126	138	2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92	393	216	1,501
기타 제품 제조업	0	35	0	35
도매 및 소매업	500	0	0	500
운수 및 창고업	0	0	532	532
숙박 및 음식점업	0	71	31	1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0	0	523	663
합계	6,643	3,841	8,369	18,853

■ 기회발전특구 대상 주력 산업 후보군 선정

- 전라북도 기회발전특구 주력 산업군은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 중에서 최근 전라북도로의 투자가 많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군으로 선정하고자 함
 - 전라북도 민선 8기의 전략적인 유치 산업군은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 부품, 탄소융복합 소재, 수전해 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 크게 5개로 구분할 수 있음
- 식료품산업의 경우,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 중 스마트농생명산업에 해당하지만,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식료품산업, 화학산업과 의약품산업이 융합되어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유치 대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 중 미래수송기계에 해당하며 김제와 익산을 중심으로 특장차와 농기계 생산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어 이러한 산업생태계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특수목적 기반 모빌리티 산업으로 유치 산업군을 선정하고자 함
- 전기장비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전기장비 부품 생산업체들을 유치하였는데,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이차전지에 특화된 에너지산업으로 유치 산업군을 선정하고자 함
- 또한 최근 호텔(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단지 개발(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투자 유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가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이기 때문에 관광산업도 유치 산업군으로 선정하고자 함
- 최근 투자 실적은 없지만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산업업체와 유치 협상을 하고 있어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유치 산업군으로 선정함
 - 2023년 4월에 새만금개발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라북도는 2026년 기업연계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무인 드론, 로봇 등 첨단 방위산업 연구 및 실증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 또한 중견기업급 이상은 없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스포츠 특화형²⁾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방위산업과 연계하여 드론산업도 유치산업으로 선정함

- 이와 같은 검토 결과,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기업 유치모델의 주력 산업군을 농생명바이오산업(레드바이오산업),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 이차전지 중심 에너지산업과 관광산업, 드론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선정하였음
-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산업분류코드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방위산업과 드론산업의 산업분류코드는 참고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타겟기업³⁾만을 선정하였음

[표 2-18] 전략적 기업 유치 산업군

분야	코드	분류명
농생명바이오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0802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원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2)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을 중심으로 국제 드론 축구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드론 체험장 및 교육원을 확보하고 있음
- 3) 업종코드로 분류하지 않고 캠틱종합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드론산업 및 방위산업 기업 리스트로 조사함

분야	코드	분류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이차전지	28202	축전지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6292	전자 저장기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0119	석탄 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목적기반 모빌리티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관광	91210
91292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2) 기획발전특구 유치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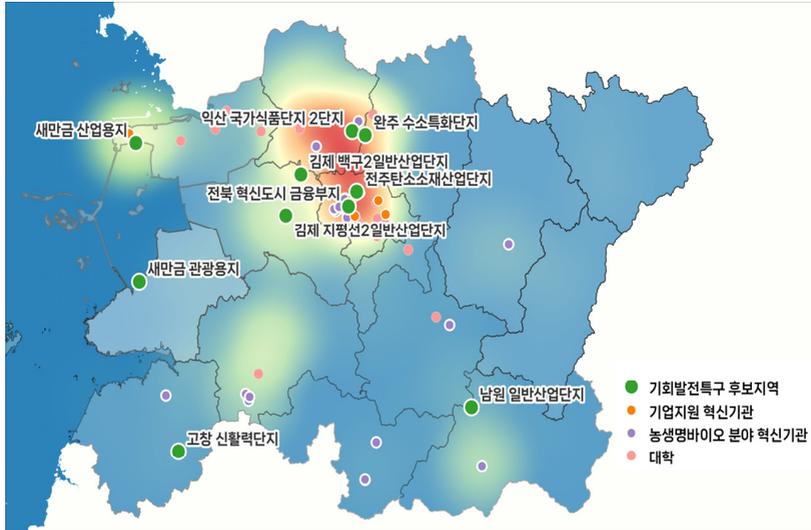
- (농생명바이오) 농생명바이오 산업군의 전국 대비 전라북도 LQ 지수는 0.51이며, 특히 기획발전특구 후보지역 중 완주군의 LQ지수는 1.27로 농생명바이오산업군에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전체 종사자 수 기준으로 도출한 LQ지수에서도 군산시(1.10), 익산시(1.60), 김제시(1.05), 완주군(2.51) 등 기획발전특구 후보지역들 대부분 지역에서 농생명바이오산업군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19] 농생명바이오 종사자 기준 LQ

구분	총 종사자 수	농생명바이오 종사자 수	전국 기준 LQ	전북 기준 LQ
전국	149,588,495	613,506		
전라북도	4,648,160	9,646	0.51	
전주시	1,583,538	1,954	0.30	0.59
군산시	686,348	1,563	0.56	1.10
익산시	729,671	2,416	0.81	1.60
정읍시	274,510	951	0.84	1.67
남원시	183,121	243	0.32	0.64
김제시	257,210	559	0.53	1.05
완주군	346,107	1,801	1.27	2.51
진안군	65,040	35	0.13	0.26
무주군	60,687	5	0.02	0.04
장수군	54,754	44	0.20	0.39
임실군	85,715	0	0.00	0.00
순창군	58,922	4	0.02	0.03
고창군	130,276	58	0.11	0.21
부안군	132,261	13	0.02	0.0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1)

-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기업(공장등록데이터 2023.10. 기준)은 전주, 익산, 완주 부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기업지원 혁신기관과 농생명바이오 분야 혁신기관 및 대학 간 거리도 비교적 가까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4] 농생명바이오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 (이차전지) 이차전지 산업군의 전국 대비 전라북도 LQ 지수는 0.83이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후보지역 중 완주군의 LQ지수가 2.43으로 가장 특화되어 있음
- 전국 대비 군산시 LQ지수도 2.01로 나타나는 등 이차전지 산업군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타 지역과 비교해 이차전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표 2-20] 이차전지 종사자 기준 LQ

구분	총 종사자 수	이차전지 종사자 수	전국 기준 LQ	전북 기준 LQ
전국	149,588,495	131,852		
전라북도	4,648,160	3,416	0.83	
전주시	1,583,538	470	0.34	0.40
군산시	686,348	1,218	2.01	2.41
익산시	729,671	442	0.69	0.82
정읍시	274,510	500	2.07	2.48

구분	총 종사자 수	이차전지 종사자 수	전국 기준 LQ	전북 기준 LQ
남원시	183,121	-	-	-
김제시	257,210	44	0.19	0.23
완주군	346,107	742	2.43	2.92
진안군	65,040	-	-	-
무주군	60,687	-	-	-
장수군	54,754	-	-	-
임실군	85,715	-	-	-
순창군	58,922	-	-	-
고창군	130,276	-	-	-
부안군	132,261	-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1)

- 이차전지 산업 관련 기업(공장등록데이터 2023.10. 기준)은 전주, 김제, 완주, 군산 등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임
- 기업지원 혁신기관과 기술 분야 혁신기관도 주로 기업이 집중된 지역 주위에 분포되어 있어 혁신기관과 기업 간 협력에 용이한 실정임



[그림 2-15] 이차전지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 (목적기반 모빌리티) 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군의 전국 대비 전라북도 LQ 지수는 0.89이며, 특히 기획발전특구 후보지역 중 완주군(4.11), 김제시(3.17) 등에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특화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대비 LQ지수가 군산시(1.18), 익산시(1.10) 등 지역에서도 1.00이상을 나타내는 등 기획발전특구 후보지역에서 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이 이미 특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2-21] 목적기반 모빌리티 종사자 기준 LQ

구분	총 종사자 수	목적기반 모빌리티 종사자 수	전국 기준 LQ	전북 기준 LQ
전국	149,588,495	375,240		
전라북도	4,648,160	10,344	0.89	
전주시	1,583,538	403	0.10	0.11
군산시	686,348	2,029	1.18	1.33
익산시	729,671	2,021	1.10	1.24
정읍시	274,510	280	0.41	0.46
남원시	183,121	-	-	-
김제시	257,210	2,047	3.17	3.58
완주군	346,107	3,564	4.11	4.63
진안군	65,040	-	-	-
무주군	60,687	-	-	-
장수군	54,754	-	-	-
임실군	85,715	-	-	-
순창군	58,922	-	-	-
고창군	130,276	-	-	-
부안군	132,261	-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1)

- 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공장등록데이터 2023.10. 기준)은 전주, 김제, 완주 등 중추 도시권을 중심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임

-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된 특장차 및 모빌리티 기술 관련 지원 기관, 국책기관 분원 등은 김제와 완주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그림 2-16] 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 (관광) 관광 산업군의 전국 대비 전라북도 LQ 지수는 0.61이며, 기회발전특구 후보지역 중 고창군(2.66), 부안군(2.04) 등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특화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22] 관광 종사자 기준 LQ

구분	총 종사자 수	관광 종사자 수	전국 기준 LQ	전북 기준 LQ
전국	149,588,495	120,182		
전라북도	4,648,160	2,262	0.61	
전주시	1,583,538	360	0.28	0.47
군산시	686,348	187	0.34	0.56
익산시	729,671	93	0.16	0.26
정읍시	274,510	226	1.02	1.69

구분	총 종사자 수	관광 종사자 수	전국 기준 LQ	전북 기준 LQ
남원시	183,121	125	0.85	1.40
김제시	257,210	118	0.57	0.94
완주군	346,107	57	0.20	0.34
진안군	65,040	601	11.50	18.99
무주군	60,687	0	0.00	0.00
장수군	54,754	0	0.00	0.00
임실군	85,715	0	0.00	0.00
순창군	58,922	0	0.00	0.00
고창군	130,276	278	2.66	4.38
부안군	132,261	217	2.04	3.37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1)

- 관광 산업 관련 기업(공장등록데이터 2023.10. 기준)은 익산을 중심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공장등록데이터(2023.10.)를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 현황으로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처럼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LQ지수와 차이를 보임



[그림 2-17] 관광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 (드론) 드론 산업 관련 기업(공장등록데이터 2023.10. 기준)은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익산, 완주 등에도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분포함



[그림 2-18] 드론 산업 및 관련 자원 현황

다. 현황 분석에 대한 시사점

■ 전라북도 산업 및 기업

- (산업구조) 전라북도 산업구조는 전국 대비하여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3차 산업은 낮은 수준에 있어 2,3차 산업 비중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기업 유치 및 창업 정책이 요구됨
- (기업구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영세한 사업체 비중이 높고 창업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견기업 급 이상의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앵커기업 확보가 필요함
-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노후 산업단지가 50%에 달하고 있고 서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산업단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됨
- (토지공급) 이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2026년 이후 준공 예정에 있어 당장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상황

■ 전라북도 산업정책

- (6대 혁신성장산업)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군은 ①에너지신산업, ②미래수송기계, ③첨단융복합소재, ④라이프케어, ⑤스마트농생명, ⑥정보통신융합산업임
 -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연료전지·이차전지 중심으로 전주권 군집이 강화(전주·완주·익산)되고 있으며, 미래수송기계 분야에서는 수송부문 침체로 완성차·조선소 소재지 약화, 김제 군집이 특징차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 추세를 보임
 - 첨단융복합소재 분야에서는 화학소재·탄소섬유 중심으로 전주권 군집이 강화(전주·완주·익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라이프케어 부문에서는 의료기기·화장품·제약을 중심으로 전주권과 남원 군집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스마트농생명 분야에서는 사료·농기계·사료 중심으로 전주권, 군산, 정읍 군집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융합 분야에서도 반도체·센서·조명 중심으로 도시적 특성이 강한 익산, 전주, 군산에서 강화되고 있음

- (혁신기관) 6대 혁신성장산업 중 에너지산업, 미래수송기계, 스마트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관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에 집적화되어 있음
 -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이 분포
 - 전북대 등의 지역 대학은 지역의 혁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학과를 개설하여 산업체 인력 공급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 학과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하여 지역 R&D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연구기관은 공공부문 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부문 혁신 인프라가 우수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체 중심의 민간부문 혁신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임
- (특구) 2개의 규제특구, 3개 지구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와 1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 1개의 투자진흥특구 등 총 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 전주시와 혁신도시의 사업화촉진지구 연구개발특구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고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을 연계하여 벤처창업, 탄소소재 연구 및 생산거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기관이 입주함
 - 완주군의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에는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 등 융복합 소재부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을 수행하는 전주과학연구단지 등이 입주함
 - 정읍시의 농생명융합거점지구에는 농생명 융합 분야에서 연구와 생산의 거점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이 입주하고 있음
 - 군산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핵융합연구원 등이 입주하고 있음
 - 군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는 LNG 이격거리,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 초소형 전기특수차 주행 등의 특례가 적용됨
 -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탄소융복합 분야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선박 건조 실증,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제작,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실증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이차전지 및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 감면, 법인 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 (지역정책) 전라북도는 기업친화적 행정체계를 통해 기업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수인력 수급 문제, 열악한 정주환경의 한계가 공존하는 실정임
 - 전라북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및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발전 특별회계/특례를 신설할 계획임

■ 전라북도 투자유치 강/약점 평가

- 산업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GM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서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그 이후 산업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수행하면서 공공부분의 혁신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게 되었고 공공 R&D 기관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공공 지원이 수행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산업 규모가 영세하고 앵커기업이 부재하여 민간 부분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후방산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유인 요인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투자 환경 측면에서는 새만금의 산업용지 조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대규모 개발 가능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KTX를 통해 수도권으로부터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충청 지역 다음으로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건립이 계획되어 있지만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예산 축소로 인해 글로벌 교통망 구축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이외 다른 지역은 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을 이루고 있고 IT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산업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산업 육성 및 고도화 정책 수립에 대한 노하우를 얻었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선 7기를 넘어서는 유치 실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향후 유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청년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 인력 수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의 인구 규모가 60만명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생활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만큼의 정주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표 2-23] 전라북도 투자유치 강점과 약점

구분	강점	약점
지역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우수한 혁신 인프라 · 적극적인 산업위기 대응/고도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한 산업 규모와 앵커기업 부재 · 민간부문 혁신역량과 후방산업 부족
투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토지가격과 풍부한 개발 가용지 · 새만금의 우수한 글로벌/광역교통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권 중심의 지역 내 불균형 성장 · 노후화/생산기능 중심/디지털 취약성
인력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친화적 행정조직과 지원제도 · 전북자치도 격상에 따른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한계 · 대도시 부재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

3. 기회발전특구 후보지 검토

■ 기회발전특구 수요조사 개요

- 전라북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 여부와 우선순위, 지원 인센티브 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 유치 위치, 면적, 기대 유치업종, 활용목적, 입주조건, 지원 인센티브 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유치 수요가 도출되었음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3. 09. 10. ~ 2023. 09. 20.(10일 간)
- 조사 대상 : 14개 시·군
- 조사 방법 : 공문 회신
- 조사 부수 : 8개 시·군

■ 전라북도 내 기회발전특구 수요조사 결과

- '23년 하반기 전라북도에서 시군별 산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서북부 지역을 비롯한 지역에서 주로 모빌리티/드론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났으며,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수요도 크게 나타남
 - 6대 혁신성장산업 중 미래수송기계와 스마트농생명 산업의 확장 차원에서 기존 주력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신산업 중심으로 기업 유치 수요 발생
 - 에너지신산업 중 이차전지의 경우, 최근 전라북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계속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투자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완주가 민선7기부터 추진해온 수소산업을 제외하고 희망 지역이 없었음
- 전주시는 탄소소재 산업단지 내 탄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탄소소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기존 앵커기업(효성)을 유치해 탄소 국가산단 내 산업 집적화를 추진 중에 있음

- 익산시 3산업단지 내 농기계 및 반도체 분야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수도권 지역과의 연결성, 원광대, 우석대 등 인근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풍부한 인적자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남원시는 항공-드론 및 UAM 산업(LX 드론활용센터 인근 유치 희망), 스마트농생명 산업(남원일반산업단지(곤충), 인월농공단지(식품)), 바이오산업(노암농공단지)을 유치하려는 수요가 있음
 - (항공-드론-UAM) 남원시에는 LX드론활용센터, 한화시스템과의 UAM분야 업무협약 체결,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정 등 관련 특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 (스마트 농생명) 스마트농생명 산업과 관련해 곤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예정 중에 있으며, 식품산업과 관련해 인월농공단지 내 기 입주한 CJ와 연계 기업 유치 등을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음
 - (바이오) 노암농공단지 내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 원료생산·제조시설 구축을 통해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어 관련 산업 지원이 가능한 실정임
-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자동차, 기계·금속 및 전자부품업종을, 백구특장차2단지를 중심으로 특장차 및 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고자 함
 - 김제시에서는 높은 접근성과 입주여건, 주변 특화자원 지원 등 조건을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해 모빌리티 부분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완주군은 수소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소모빌리티, 용품, 에너지 사업을 유치하고자 함
 - 전라북도 과학연구단지, 전주과학일반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농공단지, 수소특화단지의 연계 개발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교통 접근성이 유리함
- 진안군은 진안연장농공단지,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농생명, 에너지 신산업 분야 업종을 유치하고자 함
 - 고속도로와 연접한 단지의 높은 접근성과 GMP시설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입주여건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장수군은 장수군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식품/전기전자/기타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장수군에서는 물류접근성과 입주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상하면 일대에 에너지 신산업, 반도체 업종을 유치해 에너지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편리한 인프라) 고창군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인근에 교육 및 의료,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이 완비되어 있음
 - (해상풍력단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가능해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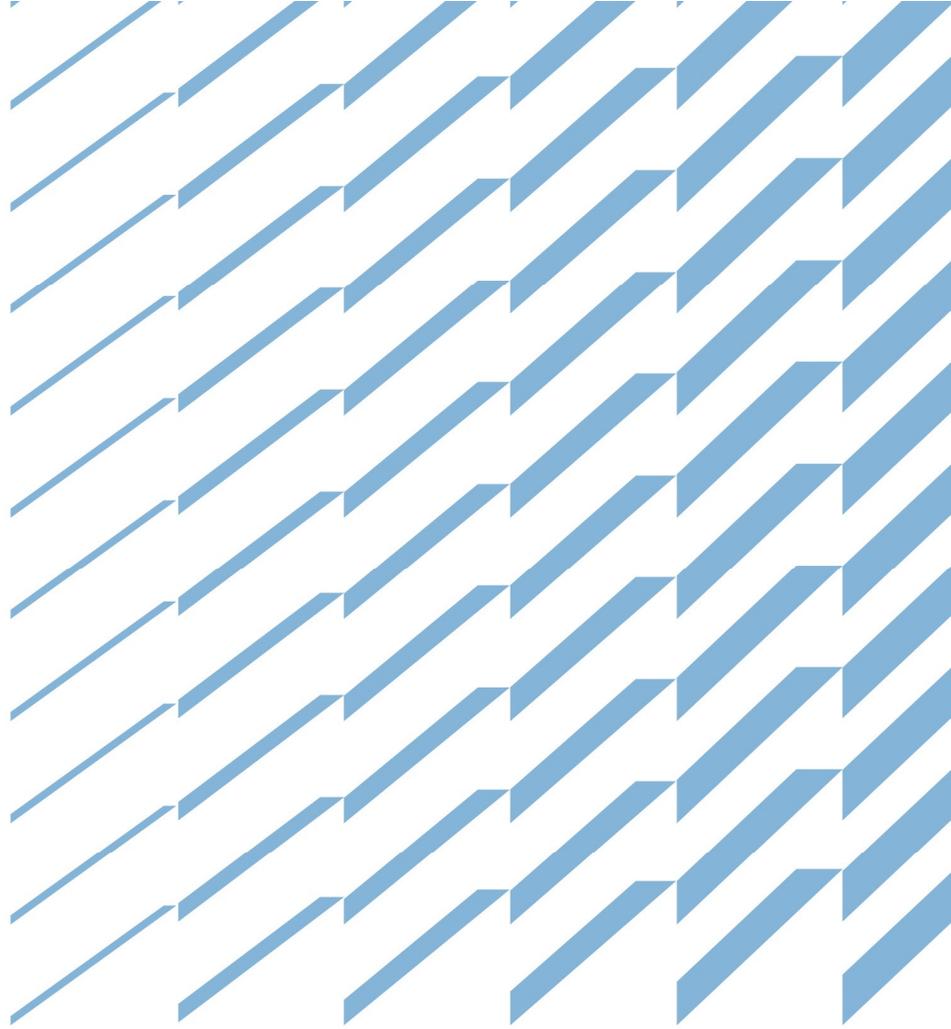
[표 2-24] 시군별 수요 조사 결과

구분	모빌리티/드론	농생명/바이오	이차전지
희망산업	· 완주(수소모빌리티) · 김제(특장차/부품) · 익산(농기계) · 남원(드론/UAM) · 전주(탄소소부장)	· 남원(곤충/식품/바이오) · 진안(건강기능식품) · (+정읍/김제/익산)	· 김제(전자부품) · 장수(전기전자)
면적	· 213만㎡ · 완주(165만㎡) · 김제(33만㎡) · 익산(198만㎡) · 남원(90만㎡) · 전주(123만㎡)	· 78만㎡ · 남원(10만/10만/8만) · 진안(50만)	· 30만㎡ · 김제(30만㎡)
유치자원	· 완주(수소/ESS센터) · 김제(인증센터/생기원) · 익산(앵커기업/접근성) · 남원(드론센터/한화) · 전주(국가탄소거점)	· 남원(곤충클러스터) · 남원(CJ제일제당) · 남원(화장품클러스터) · 진안(홍삼클러스터)	· 김제(인증센터/생기원)
비고	· 거점(완주/익산) · 완주-남원(55km)	· 거점(남원/익산/정읍)	· 이차전지특화단지(새만금2공구)

자료 : 시·군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시군별로 선호하는 산업군을 유치하기 위한 토지 공급 시점을 따져 보면, 즉시 분양 혹은 공급가능한 지역은 새만금 산업단지, 남원과 고창 일반산업단지이며, 나머지는 2026년 이후에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기회발전특구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새만금 산업용지의 경우 단계적으로 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효과나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남원과 고창의 경우에는 바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지역의 통근 패턴을 볼 때, 광주광역시로 인구 흡수 가능성이 높아 국가나 광역 단위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인구 유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후순위 고려 대상이 될 것임



제 3 장

기업 유치 추진 모델 검토

1. 기업 유치 후보지와 현황조사
2.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 검토
3. 산업별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 가능성 검토



제3장 기업 유치 추진 모델 검토

1. 기업 유치 후보지와 현황조사

가. 기업 유치 후보지 선정 개요

- 2024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과 그 이후에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업 유치 전략을 구상하고자 함
- 2024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현재 제도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표 3-1]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근로자 등의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할 것

-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중 하나로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이 있는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검토하고자 함
 - 추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개별입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을 보면 즉시 분양 혹은 공급가능한 지역은 새만금 산업단지, 남원과 고창 일반산업단지이며, 나머지는 2026년 이후에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기회발전특구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새만금 산업용지의 경우 단계적으로 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효과나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남원과 고창의 경우에는 바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지역의 통근 패턴을 볼 때, 광주광역시로 인구 흡수 가능성이 높아 국가나 광역 단위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후순위 고려 대상이 될 것임

[표 3-2] 기회발전특구 후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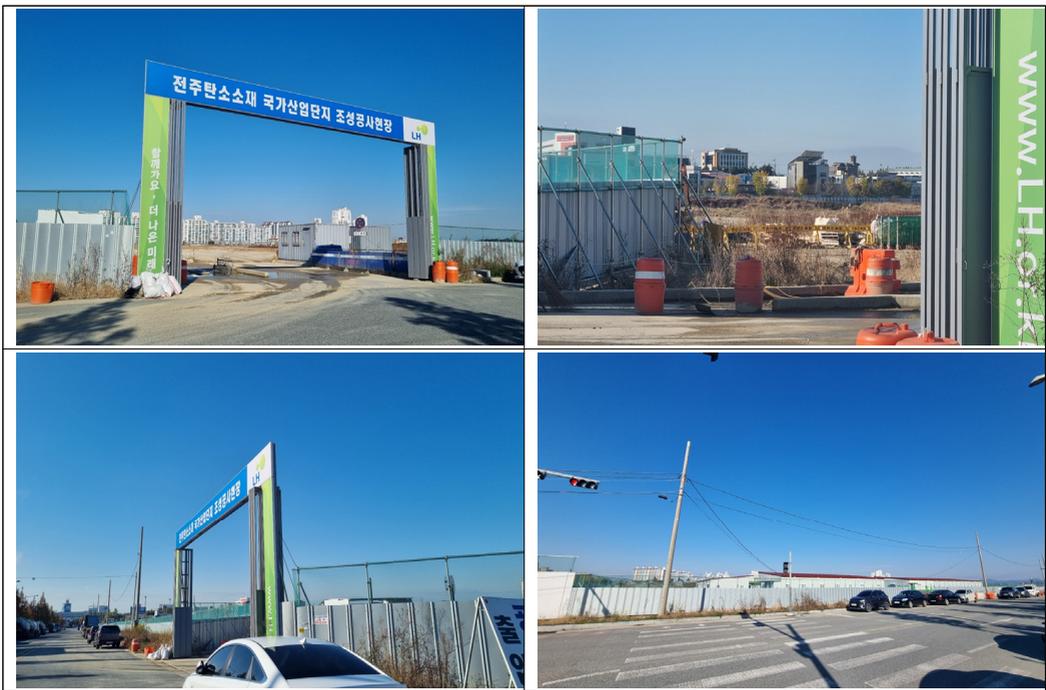
위 치	면 적	주 요 특 징
새만금 산업용지 (군산)	107만평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 7공구 '24.12월, 8공구 '25.2월 준공 예정
새만금 관광용지 (부안)	300만평	- 대규모 복합레저용지로 구상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산업용지로 전환 가능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19.8만평	- 탄소섬유 등 탄소소재 전용 국가산업단지 - '26년 준공 예정
전주 혁신도시	0.4만평	- 연구개발특구에 포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63만평	- 식품 및 바이오산업 특화 지원 기관 입주 - 준공 시점 미확정
김제 지평선2산업단지	27만평	- 특장차 및 기계부품 특화 - '26년 준공 예정
김제 백구2산업단지	10만평	- 특장차 및 기계부품 특화 - '25년 준공 예정
남원 일반산업단지	23.5만평	- 화장품 등 레드바이오 집적 - 즉시 입주 가능
완주 수소특화단지	50만평	- 상용차 및 수소연료전지 특화 조성 - 준공 시점 미확정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25만평	- 삼성전자 물류센터 입주 예정 - 즉시 입주 가능

나. 기업 유치 후보 지역

가) 전주 탄소소재 국가 산업단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전주 덕진구 동산동 일대
- 면적 : 19.8만 평(65만㎡)
- 유치 업종 : 탄소기계, 탄소전자, 탄소 기타 제조업, R&D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현재 조성 단계에 있으며, 문화재 발굴로 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따라 2024년부터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어 2024년 기회발전특구 추진 시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

- (정주환경 확보 가능) 전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음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다수의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업의 집적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인근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탄소산 업진흥원 등 혁신기관이 다수 있어 기업 지원을 받기 용이하며, 2023년 11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북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임
- (경제성 확보 가능)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함
- (종합결론) 2024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 가능한 지역임

나) 전북 혁신도시 금융부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6-1
- 면적 : 약 0.4만평(13,223㎡)
- 유치 업종 : 금융, IT, R&D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현재 전북금융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초 11층 규모의 건물로 2026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 11월에 15개 관계기관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 협약 체결로 30층 규모의 건물로 금융센터 및 금융·디지털 혁신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장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임



- (정주환경 확보 가능)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법조타운)이 인근에 있어 양질의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바로 인접해 있고 전북콘텐츠진흥원, 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수 있어 이와 관련한 금융 및 IT 산업 연계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은 많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경제성 확보 가능)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해 재원 확보 여부

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금융 및 IT 기업 유치의 최적지임

- (종합결론) 2024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2026년 이내에 기회발전특구로 추진이 가능함

다) 군산 새만금 산업용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군산 국가산업단지 연접 새만금 부지
- 면적 : 107만평(74.4km²)
-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있으며, 7공구 '24.12월, 8공구 '25.2월 준공될 예정임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현재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으며 분양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으로 7공구와 8공구 준공 시점에 개발 가용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투자진흥지구로 추가지정될 예정임
- (정주환경 확보 가능)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공주택 용지는 3-2공구와 4공구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의 준공 예정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새만금 내 수변도시는 2027년 입주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근 지역 정주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간동안은 군산시가 정주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음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새만금 산업용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받아 이차전지 기업 중심으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주변으로 교통 관련 산업 및 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에 있어 이차전지 전방산업 연계는 가능하지만, 후방산업 연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업 유치가 필요함
- (경제성 확보 가능) 토지 조성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새만금 종합계획의 재수립이 결정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진흥지구로 이미 지정된 상황에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중복 지정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음
- (종합결론) 2024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 가능하지만, 기회발전특구와 유사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제도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것임

라) 익산 2차 국가식품산업단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익산 왕궁면 일원
- 면적 : 63만평(207만㎡)

- 유치업종 : 식품, 레드바이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 한국식품연구원 등 식품 및 바이오산업 특화 지원 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 지역은 현재 분양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이며, 전북연구개발특구 확장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소기업 규모의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올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발가능지를 공급하기 어려움
- (정주환경 확보 가능) 배후 도시로 익산과 완주가 가능하며, 2차 배후도시로 전주까지 확대가 가능함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식품 산업 중심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지역이 있으며, 익산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 조성되고 있어 식품 및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익산에 있어 레드바이오로의 확장이 가능함

- (경제성 확보 가능) 2단계 사업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 비용 추가가 예상됨
- (종합결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지역은 2026년 이후에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2단계 지역보다는 1단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회발전특구보다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한 기업 유치가 적절함

마) 남원 일반산업단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37-3 일원
- 면적 : 23.5만평(775,646㎡)
- 유치 업종 : 식료품, 음료, 목재및나무제품, 펄프·종이및종이제품,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제품 제조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2024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지역임
- (정주환경 확보 가능) 남원시를 배후도시로 할 수 있으나, 광주광역시가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고 실제 광주로 통근하는 비율 및 이주 비율이 전라북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높아 기회발전특구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화장품 등 레드바이오로 관련 지원시설이 집적되어 있으며, 남원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바이오산업 관련 산업 생태계가 일부 형성되어 있음
- (경제성 확보 가능) 토지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 인력 양성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가되어야 함
- (종합결론)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으나, 주요 산업 연계성 및 경제성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바) 김제 백구2일반산업단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전북 김제 백구면 부용리·반월리 일원
- 면적 : 10만 평(336,322㎡)
-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특화자원 :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특장차 검사지원센터(설립예정), 특장차 종합지원센터(설립예정) 등
- 특장차 및 기계부품 관련 지원시설이 집적되어 있고 '26년 준공 예정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5년에 분양 및 기업 유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정주환경 확보 가능) 김제시보다는 익산시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익산KTX 및 익산 고속버스터미널과 가까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용이함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인접해있는 백구농공단지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입지해 있으며, 특장차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될 예정에 있어 특장차 및 기계부품에 특화되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함
- (경제성 확보 가능) 토지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종합결론) 2025년 분양을 전제로 하는 기업 협약을 할 경우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음

사) 김제 지평선2일반산업단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전북 김제시 상동동 일원
- 면적 : 27만평(895,000㎡)
- 유치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 특화자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능형 크레인인증센터 유치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지평선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있어 2026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4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하기 어려움
- (정주환경 확보 가능) 김제시와 바로 인접해 있어 정주환경 확보가 가능함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특장차 및 기계부품로 특화하여 산업 집적이 가능함
- (경제성 확보 가능) 토지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종합결론) 2025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적절함

아) 완주 수소특화단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완주 봉동읍 일원
- 면적 : 50만 평(165만5,000㎡)
- 유치업종 : 중대형 수소모빌리티(상용차, 농기계, 건설기계 등) 및 수소용품
- 특화자원 :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사업화지원센터, 현대차 완주공장, 일진하이솔루스 등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2023년 4월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27년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개발가능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정주환경 확보 가능) 전주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완주군청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정주환경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음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완주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가 인접해 있어 상용차 및 수소연료전지 분야 산업생태계 형성이 이루어져 있음
- (경제성 확보 가능) 2단계 사업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 비용 추가가 예상됨
- (종합결론)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적절함

자)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일원
- 면적 : 25만평(837,370㎡)
- 유치 업종 : 식료품, 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기타제품 제조업 등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2024년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황임
- (정주환경 확보 가능) 고창군 고수면과 연계하여 스포츠 시설 등 정주환경 관련 생활 인프라가 기 구축되어 있고 삼성전자 물류센터가 입주할 예정에 있어 고용자들을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계획이 있으나, 단기간에 조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정주환경이 좋은 광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식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나, 집적화의 수준은 아니며, 전라북도 내 혁신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산업 연계 가능성이 낮음
- (경제성 확보 가능) 정주환경 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됨
- (종합결론)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으나, 주요 산업 연계성 및 경제성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차) 부안 새만금 관광용지

■ 개요 및 특징

- 위치 : 부안 새만금 관광용지
- 면적 : 300만평(31.6km²)
- 대규모 복합레저용지로 구상되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산업용지로 전환할 계획임



■ 평가

- (토지 공급 가능 시점)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바로 토지 공급이 가능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새만금 종합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산업용지로 전환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주환경 확보 가능) 부안과 김제를 배후도시로 설정할 수 있으나, 향후 새만금 수변 도시 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양질의 정주환경 확보가 가능함
- (주요 산업 연계 가능) 식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나, 집적화의

-
- 수준은 아니며, 전라북도 내 혁신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산업 연계 가능성이 낮음
- (경제성 확보 가능) 정주환경 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됨
 - (종합결론) 관광·레저용지로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으나, 새만금 종합계획 변경 및 새만금 개발청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효용성이 떨어짐

2.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 검토

가. 후보지별 검토

- 10개의 후보지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2024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남원 일반산업단지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로 5개 지역임

[표 3-3]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별 검토 결과

후보지	기회발전특구 추진 가능 시점	개선 필요 사항	타겟산업	비고
새만금 산업용지(군산)	2024년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에너지산업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새만금 관광용지(부안)	2024년	새만금 종합계획 변경 신속 결정	관광산업, 방위산업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2024년	문화재조사 조기 완료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드론산업	
전주 혁신도시	2027년	전북국제금융센터 조기 착공	농생명바이오산업 금융, IT산업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특례 금융 및 핀테크 특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2027년 이후	윤석열 정부 내 추진 불가	농생명바이오산업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김제 지평선2산업단지	2026년	익산과의 교통접근성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에너지산업	
김제 백구2산업단지	2025년	정주환경 개선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남원 일반산업단지	2024년	정주환경 개선	농생명바이오산업 방위산업	
완주 수소특화단지	2027년 이후	윤석열 정부 내 추진 불가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에너지산업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2024년	연계산업 확보 정주환경 개선	-	

- 이 중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제도를 중복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정 우선순위에서 떨어짐

- 남원 일반산업단지과 고창 신활력산업단지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 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2024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지만, 정주환경 및 연계산업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창의 경우 기업 수요 조사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경우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투자 기업 발굴이 선결 과제임
 - 남원의 경우에는 농생명바이오산업과 방위산업의 기업이 투자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투자 기업 발굴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임
- 전북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중 미분양 상태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경우, 농생명바이오산업에 특화하여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미분양 중인 클러스터 용지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며, 농촌진흥청 등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들은 농생명바이오산업 중 레드바이오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전주 시내에 있어 정주환경이 좋고 공공 부문 혁신기관과 교육기관이 인근에 집적해 있어 기업 투자 환경이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 1순위임
- 2024년 이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김제에 있는 지평선2산업단지과 백구2산업단지과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할 경우 연계산업과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지정 가능성이 높음
- 만약 2024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할 때, 2024년 분양(혹은 입주)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 협약 체결을 통해 2025년이나 2026년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있을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2024년에 김제의 두 개 지역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2023년에 국가산업단지과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지역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과 지정된 경우 2027년 이후에 분양 및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어려우며, 혁신도시에 건립될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 역시 2027년에 공급 가능하여 이들 지역은 별도의 방식으로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군별 추진 방안 제안

-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공급 가능 지역 확보 뿐만 아니라 투자 기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후보지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투자 기업과의 협약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투자 기업과의 협약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은 개별입지나 기존 산업단지 내 미분양 혹은 가동 중지된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정책이 요구됨
 - 건물 철거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을 전라북도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투자 기업의 비용을 절감 시켜줘야 함

[표 3-4] 투자기업 산업 분류별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투자기업 산업 분류	1순위 지역	2순위 지역	추가 검토 가능 지역
농생명바이오	전주 혁신도시	남원 일반산업단지	정읍첨단산업단지 익산 원광대
목적기반 모빌리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김제 백구2산단 김제 지평선2산단	새만금 산업용지 전주 BYC 공장부지
이차전지	김제 지평선2산단	새만금 산업용지	군산 국가산업단지
관광	전주 혁신도시		새만금 관광용지
드론 및 방위산업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남원 일반산업단지	새만금 산업용지 새만금 관광용지

- 농생명바이오산업의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대상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남원 일반산업단지로 유치하는 방향을 접근하되, 남원의 경우 입지적으로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읍첨단산업단지나 익산 원광대 인근 개별입지를 확보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정읍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광대는 연구개발특구 확장 예정에 있음
- 또한 현재 전라북도내 전주, 익산, 정읍을 트라이앵글로 묶어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농생명바이오산업 기업 유치 방향에 부합함
-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의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1순위 유치 지역으로 두고 유치 협상을 하고 기업의 규모나 비용 측면에서 김제의 백구2산업단지와 지평선2산업단지를 2순위 유치 지역으로 둘 수 있음
- 다만,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목적기반 모빌리티의 부품·소재에 특화된 기업 유치에 적합하고 김제 산업단지는 완성품 제조 기업 유치에 적합함
-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게 될 경우, 한 지역에 집적화하여 하나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방안과 기초 지자체간의 연계 발전을 위해 분산 유치하여 다수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검토는 추후 진행하고자 함
- 이차전지를 포함한 에너지산업의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와 가까운 김제 지평선2산업단지를 1순위로 두되,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새만금 산업용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관광산업의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기능을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전주 혁신도시, 테마파크나 유원지 사업을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1순위 유치 지역으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드론 및 방위산업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1순위 후보지역으로, 남원 일반산업단지를 2순위 후보지역으로 두되, 유치 의향 기업이 대규모 실험 및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만금 관광용지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3. 산업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활용 가능성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023년 1월 17일에 제정되어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11일에 28개 조문에서 131개 조문으로 확대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2025년부터 여러 유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지향하면서 농생명산업과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생명산업 육성, 모빌리티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을 포함한 전환산업 진흥을 위해 다수의 지원 사업 및 제도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체계

- 먼저 생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업과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4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지구 내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탄소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 도지사는 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정성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
- 바이오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표 3-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20.12.8) 내용 중 생명산업 육성 관련 내용

<p>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⑤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및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가공·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에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모빌리티산업 및 관광산업 등 전환산업 진흥과 관련한 사업과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3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임
-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악관광 육성을 위해 도지사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악관광진흥특구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함

[표 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20.12.8) 내용 중 전환산업 진흥 관련 내용

<p>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 특구(이하 “진흥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진흥특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5.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진흥특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8.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p>② 도지사는 진흥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진흥특구 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후 종합계획심의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진흥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진흥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p>

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진흥특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특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특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⑨ 진흥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지원 사업 및 제도를 실시하는 있는 사항은 7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새만금 고용특구의 경우 도지사가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 금융 연계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발하는 IT 및 금융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지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법인세 감면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효과가 없으며, 향후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시에 개정을 추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임
-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일반적으로 공모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구조인데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새만금 사업 지역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한정하여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도지사가 지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됨

[표 3-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20.12.8) 내용 중 투자유치 관련 내용

<p>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서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해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육성지구 내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성지구 내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2. 육성지구 내의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 확인 지원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업무 <p>③ 제1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해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 등의 심의를 마친 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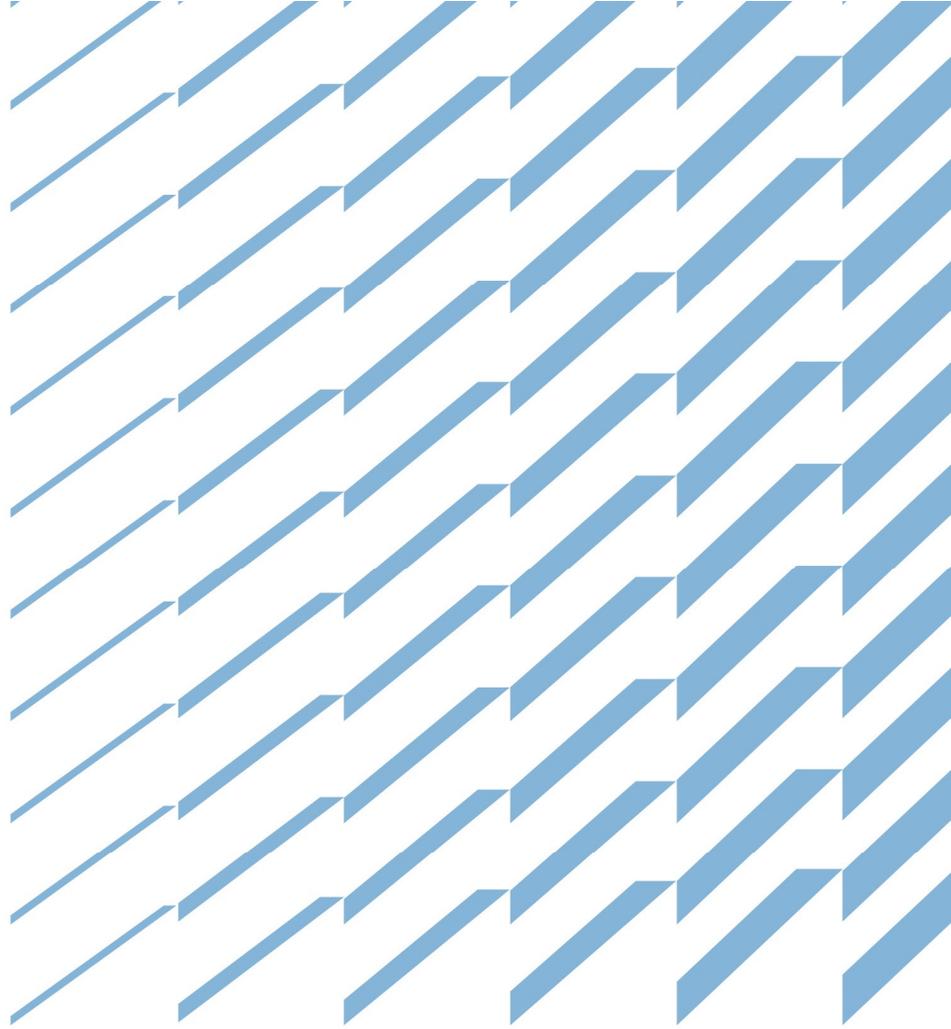
1.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면적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절차에 따른다.
-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전북형 기업유치모델 추진 방안

1. 투자 의향 기업 검토
2. 전북형 기업유치모델 기본 방향
3. 타겟 산업별 기업 유치 전략 및 공간 구상
4. 타겟 산업별 핵심과제 및 연계과제



제 4 장 전복형 기업유치모델 추진 방안

1. 투자 의향 기업 검토

가. 기회발전특구 투자 의향 기업 조사

■ 기회발전특구 투자 의향 기업 조사 개요

- 기회발전특구 타겟 5개 산업군에 해당되는 수도권 소재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이전 의향 조사를 추진하여 이전 가능 지역과 이전 시 지원이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정책 등을 조사하였음
 -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산업분류코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방위사업체로 알려진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3. 10. 30. ~ 2023. 11. 24.(26일 간)
- 조사 대상 : 전라북도 기회발전특구 타겟 산업군 해당 수도권 소재 기업 500개
- 조사 방법 : 유선, 이메일 조사
- 조사 부수 : 100건

■ 조사 참여 기업 기본 현황

- 조사대상 500개 기업 중 해당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총 100개 기업이며, 농생명바이오, 목적기반 모빌리티, 방위산업, 이차전지, 관광분야 기업들이 응답함
 - 응답 기업에는 본사 기준 평균 206명의 종사자가 재직 중이며, 방위산업군 기업의 평균 종사자가 46.8명으로 가장 적었고, 관광군 기업의 평균 종사자가 84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 기업 기본 현황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	
	응답 수	비중		
관광	대기업	2	2.0	1733.0
	중견기업	4	4.0	398.5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
	소계	6	6.0	843.3
농생명 바이오	대기업	3	3.0	303.3
	중견기업	36	36.0	116.8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
	소계	39	39.0	131.6
목적기 반 모빌리 티	대기업	1	1.0	93.0
	중견기업	23	23.0	279.1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
	소계	24	24.0	270.7
방위	대기업	-	-	-
	중견기업	-	-	-
	중소기업	21	21.0	47.7
	소상공인	1	1.0	9.0
	소계	22	22.0	46.8
이차전 지	대기업	-	-	-
	중견기업	9	9.0	322.0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
	소계	9	9.0	322.0
계	76	100.0	205.6	

■ 조사 결과

- 향후 5년 내 이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99%는 이전 의향이 없다고 답하였고, 1%(1개 기업*)만 이전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1개 기업 : 방위산업 분야 드론 생산 소기업

[표 4-2] 향후 5년 내 이전 의향 여부

(단위 : 개, %)

구분		이전 의향 있다		이전 의향 없다		계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관광	대기업	-	-	2	2.0	2	2.0
	중견기업	-	-	4	4.0	4	4.0
	중소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
	소계	-	-	6	6.0	6	6.0
농생명 바이오	대기업	-	-	3	3.0	3	3.0
	중견기업	-	-	36	36.0	36	36.0
	중소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
	소계	-	-	39	39.0	39	39.0
목적기반 모빌리티	대기업	-	-	1	1.0	1	1.0
	중견기업	-	-	23	23.0	23	23.0
	중소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
	소계	-	-	24	24.0	24	24.0
방위	대기업	-	-	-	-	-	-
	중견기업	-	-	-	-	-	-
	중소기업	1	1.0	20	20.0	21	21.0
	소상공인	-	-	1	1.0	1	1.0
	소계	1	1.0	21	21.0	22	22.0
이차전지	대기업	-	-	-	-	-	-
	중견기업	-	-	9	9.0	9	9.0
	중소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
	소계	-	-	9	9.0	9	9.0
계		1	1.0%	99	99.0%	100	100.0

- 설문조사 이전,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1.0%는 알고 있었다고 답하였고, 농생명바이오군 기업과 방위산업군 기업에서 알고 있었다는 답변이 각 5.0%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4-3] 기회발전특구 제도 인지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		계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관광	대기업	-	-	2	2.0	2	2.0
	중견기업	-	-	4	4.0	4	4.0
	중소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
	소계	-	-	6	6.0	6	6.0
농생명 바이오	대기업	1	1.0	2	2.0	3	3.0
	중견기업	4	4.0	32	32.0	36	36.0
	중소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
	소계	5	5.0	34	34.0	39	39.0
목적기반 모빌리티	대기업	-	-	1	1.0	1	1.0
	중견기업	1	1.0	22	22.0	23	23.0
	중소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
	소계	1	1.0	22	22.0	24	24.0
방위	대기업	-	-	-	-	-	-
	중견기업	-	-	-	-	-	-
	중소기업	4	4.0	17	17.0	21	21.0
	소상공인	1	1.0	-	-	1	1.0
	소계	5	5.0	17	17.0	22	22.0
이차전지	대기업	-	-	-	-	-	-
	중견기업	-	-	9	9.0	9	9.0
	중소기업	-	-	-	-	-	-
	소상공인	-	-	-	-	-	-
	소계	-	-	9	9.0	9	9.0
계		11	11.0%	89	89.0%	100	100.0

-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이외 지방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전원이 이전 의향이 없다고 답변함

[표 4-4] 기획발전특구 시행 시 이전 의향

(단위 : 개, %)

구분	이전 의향 있다		이전 의향 없다		계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관광	-	-	6	6.0	6	6.0
농생명바이오	-	-	39	39.0	39	39.0
목적기반 모빌리티	-	-	24	24.0	24	24.0
방위산업	-	-	22	22.0	22	22.0
이차전지	-	-	9	9.0	9	9.0
계	-	-	100	100.0	100	100.0

- 기획발전특구 제도 시행에도 지방 이전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입지가 최적의 입지라는 답변이 42.2%로 가장 많았고, 기존 거래처와 거래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22.9%, 기타 답변이 18.3%로 뒤를 이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타 지역 이전의 이유가 없어서, 관련 공장의 허가 과정이 어려워져서, 이미 이전/신축 중 이라서, 타 지자체와 기획발전특구를 추진 중이기 때문(방위산업 분야 1개 업체) 등의 답변이 있었음

[표 4-5] 기획발전특구 제도 시행에도 지방 이전 의향 없는 이유

(단위 : 개, %)

구분		세제혜택 메리트 없음		이전 비용의 부담		종사자의 반발		인력 수급 불편 예상		기존 거래처와 거래 차질		현재가 최적 입지		기타		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관광	대기업	-	-	-	-	-	-	1	0.9	-	-	2	1.8	-	-	3	2.8
	중간기업	-	-	-	-	-	-	1	0.9	2	1.8	3	2.8	-	-	6	5.5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2	1.8	2	1.8	5	4.6	-	-	9	8.3

(단위 : 개, %)

구분		세제혜택 메리트 없음		이전 비용의 부담		종사자의 반발		인력 수급 불편 예상		기존 거래처와 거래 차질		현재가 최적 입지		기타		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농생명 바이오	대기업	1	0.9	-	-	-	-	-	-	1	0.9	1	0.9	-	-	3	2.8
	중견기업	-	-	1	0.9	3	2.8	5	4.6	5	4.6	11	10.1	11	10.1	36	33.0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1	0.9	1	0.9	3	2.8	5	4.6	6	5.5	12	11.0	11	10.1	39	35.8
목적반 모발모티	대기업	-	-	-	-	-	-	-	-	-	-	-	-	1	0.9	1	0.9
	중견기업	-	-	-	-	-	-	-	-	6	5.5	13	11.9	6	5.5	25	22.9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6	5.5	13	11.9	7	6.4	26	23.9
방위	대기업	-	-	-	-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	-	1	0.9	3	2.8	2	1.8	8	7.3	8	7.3	1	0.9	23	21.2
	소상공인	-	-	-	-	-	-	-	-	1	0.9	-	-	-	-	1	0.9
	소계	-	-	1	0.9	3	2.8	2	1.8	9	8.3	8	7.3	1	0.9	24	22.0
이차전지	대기업	-	-	-	-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2	1.8	8	7.3	1	0.9	11	10.1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2	1.8	8	7.3	1	0.9	11	10.1
계	1	0.9	2	1.8	6	5.5	9	8.3	25	22.9	46	42.2	20	18.3	109	100	

주) 1순위 및 2순위 답변을 중복 집계하였음

- 지역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성이 38.3%, 관련 산업군의 집적효과 23.4%, 인력 수급 용이성 18.3%로 나타남

- 목적기반 모빌리티는 관련 산업군 집적율(11.7%), 관광, 농생명바이오과 산업군방위산업, 이차전지 산업군에서는 시장 접근성(각각 3.4%, 13.1%, 9.1%, 3.4%)을 주요 사유로 응답함

[표 4-6]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 시, 주요 이전 사유

(단위 : 개, %)

구분	시장 접근성		합리적 부지 매입비		관련 산업군 집적효과		관련 자원/인력/시설 접근성		인력 수급 용이성		해당 지자체 행정지원		기타		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관광	대기업	2	1.1	-	-	-	-	-	-	1	0.6	-	-	-	-	3	1.7
	중견기업	4	2.3	1	0.6	1	0.6	-	-	-	-	-	-	-	6	3.4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6	3.4	1	0.6	1	0.6	-	-	1	0.6	-	-	-	-	9	5.1
농생명 바이오	대기업	2	1.1	-	-	-	-	-	-	3	1.7	-	-	-	-	5	2.9
	중견기업	21	120	3	1.7	11	6.3	12	6.9	15	8.6	2	1.1	1	0.6	65	37.1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23	131	3	1.7	11	6.3	12	6.9	18	10.3	2	1.1	1	0.6	70	400
목적기반 모빌리티	대기업	1	0.6	-	-	1	0.6	-	-	-	-	-	-	-	2	1.1	
	중견기업	15	8.6	1	0.6	16	9.1	4	2.3	-	-	-	-	1	0.6	37	21.1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16	9.1	1	0.6	17	9.7	4	2.3	-	-	-	-	1	0.6	39	22.3
방위	대기업	-	-	-	-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15	8.6	-	-	8	4.6	3	1.7	11	6.3	2	1.1	-	-	39	22.3
	소상공인	1	0.6	-	-	-	-	-	-	1	0.6	-	-	-	-	2	1.1
	소계	16	9.1	-	-	8	4.6	3	1.7	12	6.9	2	1.1	-	-	41	23.4
이차전지	대기업	-	-	-	-	-	-	-	-	-	-	-	-	-	-	-	-
	중견기업	6	3.4	3	1.7	4	2.3	1	0.6	1	0.6	-	-	1	0.6	16	9.1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6	3.4	3	1.7	4	2.3	1	0.6	1	0.6	-	-	1	0.6	16	9.1
계	67	383	8	4.6	41	23.4	20	11.4	32	18.3	4	2.3	3	1.7	175	100	

주) 1순위 및 2순위 답변을 중복 집계하였음

- 전라북도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에 이전 희망 지역은 군산 새만금 산업용지(26.7%),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21.7%), 전주 혁신도시(20.0%) 순으로 나타남
- 농생명바이오 산업군에서는 전주 혁신도시(11.7%)와 익산 국가식품산업단지(18.3%)를, 방위산업군에서는 군산 새만금산업용지(16.7%)를, 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군에서는 김제 백구 2단지, 새만금 산업용지(각 5.0%), 관광 산업군에서는 전주 혁신도시(3.3%), 이차전지 산업군에서는 김제 지평선2산업단지(3.3%)를 가장 희망하는 지역으로 응답하였음

[표 4-7] 전라북도 특구 지정 시 이전 희망 지역

(단위 : 개, %)

구분		새만금 산업용지 (군산)	새만금 관광용지 (부안)	전주 탄소산단	전주 혁신도시	익산 국가 식품산단	김제 지평선 2산단	김제 백구 2단지	남원 일반산단	완주 수소 특화단지	고창 신활력	기타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관광	대기업	-	-	-	-	1	1.7	1	1.7	-	-	-	-	-	2	3.3				
	중견기업	-	-	1	1.7	-	-	1	1.7	-	-	-	-	-	3	5.0				
	중소기업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소계	-	-	1	1.7	-	-	2	3.3	1	1.7	-	-	-	5	8.3				
농생명 바이오	대기업	-	-	-	-	1	1.7	-	-	-	-	-	-	-	1	1.7				
	중견기업	2	3.3	-	-	2	3.3	6	10.0	11	18.3	1	1.7	-	-	24	40.0			
	중소기업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소계	2	3.3	-	-	2	3.3	7	11.7	11	18.3	1	1.7	-	-	25	41.7			
목적기반 모빌리티	대기업	-	-	-	-	-	-	-	-	-	-	-	-	-	-	-				
	중견기업	3	5.0	-	-	-	-	1	1.7	3	5.0	-	-	1	1.7	8	13.3			
	중소기업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소계	3	5.0	-	-	-	-	1	1.7	3	5.0	-	-	1	1.7	8	13.3			
방위	대기업	-	-	-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	-	-	-	-	-	-				
	중소기업	10	16.7	-	-	2	3.3	3	5.0	1	1.7	-	-	1	1.7	19	31.7			
	소상공인	1	1.7	-	-	-	-	-	-	-	-	-	-	-	1	1.7				
	소계	11	18.3	-	-	2	3.3	3	5.0	1	1.7	-	-	1	1.7	20	33.3			
이차전지	대기업	-	-	-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2	3.3	-	-	-	-	-	2	3.3				
	중소기업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소계	-	-	-	-	-	-	2	3.3	-	-	-	-	-	2	3.3				
계	16	26.7	1	1.7	4	6.7	12	20.0	13	21.7	4	6.7	5	8.3	3	5.0	1	1.7	60	100

주) 1순위 및 2순위 답변을 중복 집계하였음

-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 시 가장 필요한 특례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특례(34.0%)로 전 산업군에서 가장 큰 수요가 있었음
 - 두 번째는 실증 및 연구개발 과정 관련 특례(22.2%), 기업 간 거래 시 발생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22.0%), 세 번째는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규제 관련 특례(19.6%)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화학 분야 관련 규제 특례와 금융서비스 혜택 등에 관한 요구가 있었음

[표 4-8]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 시, 주요 이전 사유

(단위 : 개, %)

구분		생산 과정 규제 특례		실증/연구개발 관련 특례		판매 과정 규제 특례		기업 간 거래 시 발생 규제 특례		기타		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관광	대기업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	-	-	-
	중소기업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농생명 바이오	대기업	1	0.7	1	0.7	2	1.3	2	1.3	-	-	6	3.9
	중견기업	17	11.1	13	8.5	9	5.9	15	9.8	2	1.3	56	36.6
	중소기업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소계	18	11.8	14	9.2	11	7.2	17	11.1	2	1.3	62	40.5
목적기반 모빌리티	대기업	1	0.7	-	-	-	-	1	0.7	-	-	2	1.3
	중견기업	13	8.5	9	5.9	7	4.6	6	3.9	1	0.7	36	23.5
	중소기업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소계	14	9.2	9	5.9	7	4.6	7	4.6	1	0.7	38	24.8
방위	대기업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	-	-	-
	중소기업	13	8.5	10	6.5	10	6.5	6	3.9	-	-	39	25.5
	소상공인	-	-	1	0.7	1	0.7	-	-	-	-	2	1.3
	소계	13	8.5	11	7.2	11	7.2	6	3.9	-	-	41	26.8
이차전지	대기업	-	-	-	-	-	-	-	-	-	-	-	-
	중견기업	7	4.6	-	-	1	0.7	4	2.6	-	-	12	7.8
	중소기업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소계	7	4.6	-	-	1	0.7	4	2.6	-	-	12	7.8
계		52	34.0	34	22.2	30	19.6	34	22.2	3	2.0	153	100

주) 1순위 및 2순위 답변을 중복 집계하였음

-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26.9%), 연구개발 지원(24.6%), 연관기업 추가 유치를 통한 거래 비용절감 지원(17.5%) 순으로 나타남
 - 관광산업에서는 정주여건 개선(2.9%)을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 응답하였고, 농생명바이오 산업군에서는 인건비 지원(8.8%)도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는 관련 허가에 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표 4-9]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 지원 사업 수요

(단위 : 개, %)

구분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		인건비 지원		연구개발 지원		연관 기업 추가 유치		주거공간 확보		정주여건 개선		기타		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관광	대기업	2	1.2	-	-	-	-	-	-	-	-	2	1.2	-	-	4	2.3
	중견기업	1	0.6	-	-	-	-	1	0.6	-	-	3	1.8	-	-	5	2.9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3	1.8	-	-	-	-	1	0.6	-	-	5	2.9	-	-	9	5.3
농생명 바이오	대기업	2	1.2	2	1.2	-	-	-	-	1	0.6	-	-	-	-	5	2.9
	중견기업	13	7.6	13	7.6	14	8.2	11	6.4	11	6.4	5	2.9	-	-	67	39.2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15	8.8	15	8.8	14	8.2	11	6.4	12	7.0	5	2.9	-	-	72	42.1
목적기반 모빌리티	대기업	1	0.6	-	-	-	-	1	0.6	-	-	-	-	-	-	2	1.2
	중견기업	9	5.3	4	2.3	13	7.6	10	5.8	-	-	-	-	1	0.6	37	21.6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10	5.8	4	2.3	13	7.6	11	6.4	-	-	-	-	1	0.6	39	22.8
방위	대기업	-	-	-	-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10	5.8	6	3.5	12	7.0	6	3.5	3	1.8	2	1.2	-	-	39	22.8
	소상공인	1	0.6	-	-	1	0.6	-	-	-	-	-	-	-	-	2	1.2
	소계	11	6.4	6	3.5	13	7.6	6	3.5	3	1.8	2	1.2	-	-	41	24.0
이차전지	대기업	-	-	-	-	-	-	-	-	-	-	-	-	-	-	-	-
	중견기업	7	4.1	-	-	2	1.2	1	0.6	-	-	-	-	-	-	10	5.8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소상공인	-	-	-	-	-	-	-	-	-	-	-	-	-	-	-	-
	소계	7	4.1	-	-	2	1.2	1	0.6	-	-	-	-	-	-	10	5.8
계	46	26.9	25	14.6	42	24.6	30	17.5	15	8.8	12	7.0	1	0.6	171	100.0	

주) 1순위 및 2순위 답변을 중복 집계하였음

- 기업에서 응답한 지원 제도와 특례를 포함한 전북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라북도로 기업을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전원이 이전 의향이 없다고 답변함

[표 4-10] 원하는 지원제도/ 특례 확보 시 전북 기회발전특구 이전 의향

구분	이전 의향 있다		이전 의향 없다		계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관광	-	-	6	6.0	6	6.0
농생명바이오	-	-	39	39.0	39	39.0
목적기반 모빌리티	-	-	24	24.0	24	24.0
방위산업	-	-	22	22.0	22	22.0
이차전지	-	-	9	9.0	9	9.0
계	-	-	100	100.0	100	100.0

나.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 조사 대상 기업 중 11%만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한다고 해도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여 아직까지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할 때 제도 홍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전 의향이 없는 이유가 수도권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있어 최적지이고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거래처와의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인센티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의 생산 활동에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실증 및 연구개발 과정 특례, 기업 간 거래 시 발생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수요가 높아 기회발전특구 및 기업유치모형을 추진할 때 연계 인센티브로 추진해야 함
- 기업의 이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시장접근성과 관련 산업의 집적효과, 인력 수급 용이성으로 꼽을 수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단독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연계 기업을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함
 - 특히 기회발전특구의 지원 사업 수요로 기업 맞춤형 인력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와 연계하여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임
- 전라북도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은 지역은 산업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업 유치 시 지역 협상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목적기반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분야는 새만금과 김제를 중심으로, 농생명산업은 전주 혁신도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전북형 기업유치모델 기본 방향

■ 기본 방향

- (기본방향)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혁신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생명산업과 전환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한 기업유치 목표와 전략을 제시
- (전략도출)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한 전북형 기업유치모델을 구성하는 특화산업,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투자환경 조성, 특구인력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및 연계과제 도출
 - (핵심) 기회발전특구와 전북특별법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제도(인센티브, 규제/실증 특례, 펀드 등)
 - (연계) 투자기업/인력의 정착과 성과 확산을 위한 연계과제(R&D, 인력양성, 인프라 등)
- (시나리오) 전라북도의 산업 여건, 투자기업 수요,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별 시나리오 구상
 - (기존경로형) 전북 내에서 산업규모와 기반을 갖춘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산업, 이차전지 등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 기회발전특구 및 기업유치모델 적용
 - 전라북도 내에서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앵커 지역으로 선정
 - (신규경로형) 전북 산업체질 고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위산업과 관광산업
 -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회발전특구와 별개로 기업 유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방위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우, 유치 지역을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용지로 우선 추진하되, 새만금 이외의 지역은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기업 유치 추진
- (공간구상) 단기간에 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화산업별 입지 특성에 따라 다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들 간을 산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유형) 선택-집중형(방위산업, 관광산업, 에너지산업, 모빌리티), 허브-스포크(농생명바이오)
- (연계발전) 특구 내 투자기업 및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구체화된 추진과제를 포함한 사업계획 작성

■ 추진 시나리오

구분	기존 발전경로 강화형(발전형)			신규 발전경로 창출형
	목적기반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세부 산업	자동차, 조선, 농·건설기계, 드론	레드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드론, 발사체
특화 방향	모빌리티, 전장부품, 수소·전기 동력화	천연물 소재,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 실험 완제품 조립
강점	· 산업기반·앵커기업 · 연구·강소·규제특구	· 산업기반·균형발전 · 특별자치도 연계성	· 혁신자원 보유 · 성장전망(이차전지)	· 대규모 부지 가능 · 청년친화 산업군
약점	· 투자기업 부족 · 동부권 기반 부족	· 집적화 가능성 낮음 · 기업규모 영세성	· 전후방산업 부족 · 후보지 부족	· 산업기반 부족 · 전문인력 부족
후보 지역	새만금 산업용지 김제 산업단지 완주 수소특화산단	전주 탄소국가산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첨단과학산단 남원 일반산단	새만금 산업용지 김제산업단지	새만금 산업용지 전주 탄소국가산단 완주 수소특화단지
주요 기관	· 자동차융합기술원 · 건설기계부품연 · 조선해양기자재연 · 전자기술연구원 · 교통안전연구원	· 농진청/농업기술진흥원 · 생명공학연구원 · 방산연구소(원자력연) · 안전성평가연구소 ·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	· 한국재료연구원(풍력) · 전기안전공사(ESS센터) · 가스안전공사(수소용품) · 산업기술시험원(태양광) · 전북(에너지산업육성)	· 한국국토정보공사 · 건설기계부품연 · 자동차융합기술원 · 전자기술연구원
공간 구상	선택-집중형 (집적화 특성 고려)	허브-스포크 (전역에 기반 보유)	선택-집중형 (집적화 특성 고려)	선택-집중형 (실증기반 중심)
분산 배치	1~2개 기회발전특구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	3~4개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간 연계	1~2개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	1개 독립적 운영
비고				

3. 타겟 산업별 기업 유치 전략 및 공간 구상

가. 농생명바이오산업

- 농생명바이오산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주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6군데 지역으로 이 중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유치 가능한 지역은 전주 혁신도시와 남원 일반산업단지이며, 추가적으로 익산 원광대 인근 개별입지와 정읍 첨단산업단지 인근 개별입지를 고려할 수 있음

[표 4-11] 농생명바이오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지역	기회발전특구	전북특별법 적용	기타 사업 및 제도
전주 혁신도시	1순위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연구개발특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익산 원광대	후보지역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특구
남원 일반산업단지	2순위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정읍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역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연구개발특구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화장품 등과 연계한 바이오산업에 특화하여 기업 유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전북특별법의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정 효과가 없지만, 앵커 기업의 역할 및 규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음
-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주-익산-정읍 간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바

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등의 특례를 통한 시책 추진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생명바이오산업 기업 유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농생명바이오산업 분야 관련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은 익산에서 하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식품기업과 농가를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익산 이외의 남원과 고창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도 염두에 두고 기업 유치 협상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효과를 높여야 함

나.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

-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7군데 지역으로 이 중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유치 가능한 지역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김제 백구2산업단지와 지평선2산업단지이며, 새만금 산업용지와 전주 BYC 공장부지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음

[표 4-12]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지역	기회발전특구	전북특별법 적용	기타 사업 및 제도
새만금 산업용지	후보지역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1순위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소부장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전주 BYC 공장부지	후보지역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군산 국가산업단지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김제 백구2산단	2순위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김제 지평선2산단	2순위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완주 수소특화단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연구개발특구

- 새만금 산업용지 중 현재 조성된 지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 준공 예정 지역 역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예정에 있어 기회발전특구의 효과와 중복되어 지정 효과가 퇴색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가 더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정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전주 BYC 공장부지의 경우 현재 가동 중단된 상태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업용지임에도 상당히 높은 토지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 부지 매입비만 6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거 비용까지 동반된다는 약점 등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로의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 대상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와 김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인근

기 운영 중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제의 2개 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북특별법으로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조성하여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음
- 현 시점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에 특화하여 지정되고 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향후 원전, 방산,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으로도 지정 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임

다. 이차전지산업

- 전라북도에서 이차전지산업 기업 유치 최적의 환경을 가진 지역은 새만금 산업용지로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기업 투자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산업용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이차전지산업 특화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를 찾는 것을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 수요 조사에서 그나마 투자 희망 지역으로 김제 지평선2산업단지를 선택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을 1순위로 하고자 함
- 새만금 산업용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인근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산업 집적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제 지평선2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가동을 중단한 공장 부지를 대상으로 후보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장기간 미가동되고 있는 공장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추후 기본계획 수립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별도로 조사하고자 함
- 완주 수소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이차전지는 아니지만 수소연료전지의 용기 제작 등에 특화된 기업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산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분양 시점이 늦어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융복합 R&D와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거점으로 활용하여 추가 수요에 대비하는 방식이 적절함

[표 4-13] 이차전지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지역	기획발전특구	전북특별법 적용	기타 사업 및 제도
새만금 산업용지	2순위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군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역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김제 지평선2산단	1순위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완주 수소특화단지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연구개발특구

라. 관광산업

- 관광산업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종합 계획 변경 내용을 모니터링해야 함
-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 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이차전지 관련 산업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하는 관광용지는 관광·레저 기능 저하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투자 기업의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기업 유치 협상 과정에서 새만금 관광용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새만금 개발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전략 산업들이 대부분 서북권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동부권은 덕유산, 지리산을 포함하는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거점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국립공원과 관련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전북특별법을 통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을 하는 조건으로 동부권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표 4-14] 관광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지역	기회발전특구	전북특별법 적용	기타 사업 및 제도
새만금 관광용지	2순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전주 혁신도시	1순위		
전북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	

마. 드론 및 방위산업

- 현재 전라북도에 드론 및 방위산업 기반은 취약한 편으로 그나마 전주를 중심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및 인력 양성 기관이 존재함
- 방위산업의 경우, 정보 보안이 까다로워 투자 유치 협상과정이 대외비로 진행되고 있어 직접적으로 유치 협상을 하는 행정 관계자가 아닌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 다만, 현재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발사 시험체 실증을 위해 대규모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 협상이 1~2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방위산업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형 드론이나 무인 이동체의 경우 전주와 남원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표 4-15] 드론 및 방위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및 제도

지역	기회발전특구	전북특별법 적용	기타 사업 및 제도
새만금 산업용지	후보지역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새만금 관광용지	후보지역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1순위		소부장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남원 일반산업단지	2순위	전북첨단과학기술산단의 조성 및 관리	

4. 타겟 산업별 핵심과제 및 연계과제

가. 공통 과제

1) 핵심과제

가) 규제/실증 특례

■ 특허등록 기간 단축에 관한 특례

- (관련 법률) 특허법 제61조
- (현행 규제 사항) 현재 방위, 공해방지, 기술혁신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에 한해 우선 특허심사를 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한정하여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특허출원을 장려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앵커기업 중심으로 기업 유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등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특례

- (관련 법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제16조
- (현행 규제 사항) 현행 규제 체계에서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신기술의 경우에는 인증받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함
- (개선사항)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절차 간소화

2) 연계과제

가) 투자기업 R&D/사업화 지원

■ 신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제도 마련

- (현황) 신기술 관련 보조금 및 보급지원사업(시범 포함) 부족
 -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있어서 규격 및 제도 미비로 인하여 시장 진입의 어려움 지속
 - 기술 개발 속도 가속화에 따른 관련 제도 마련의 속도 조절/맞춤이 절실하며, 장기적으로 선제 대응 필요
 - 탄소산업 관련 신기술(연료전지 등)의 원활한 제품 적용을 통한 연료전지의 국제적 관심 및 수소경제 실현 시기 조기화 필요
- (문제점) 해당 기술 규격에 만족하더라도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 추진의 어려움
 - R&D 단계를 벗어나 실제 산업 상 신기술 및 적용 제품의 상용화시 규제 미비에 따른 제한/보급 불가 문제
- 개선 방안
 - 임시 규격(예: 기업 또는 연구계에서 이용하는 규격)이나 타 규격 적용을 허용
 - 3개월 이내 결론이 도출되도록 기술 규격 재개정 및 보완 또는 상시 협의체 운영
 - 초기 대량 생산 또는 보급이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사업 및 과제 (대규모 실증 과제, 정부 구매조건부 과제)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실증과제”, “구매조건부 과제”를 초기 대량 생산 또는 보급이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사업/과제로서 추진

나) 디지털·친환경 산업인프라 확충

■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 (데이터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위해『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21.10.19)하고 시행함(‘22.04.20)
- (디지털전환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고 (‘22.01.04) 시행함(‘22.07.05)

- (빅데이터센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16.7)하고 빅데이터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제9조 2항에 따라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SW진흥기관지정)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및 권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을 지정(전북디지털융합센터, '21.12)하고 있음
- (데이터활용 협업)전라북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민간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빅데이터·AI·ICT 기술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분석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역SW진흥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필요
- 이를 위해,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빅데이터의 민간영역에서의 활용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SW진흥기관으로 위탁 업무 및 담당(유관) 사업 지정 추진 필요

나. 농생명바이오산업

1) 핵심과제

가) 규제/실증 특례

■ 바이오산업 기업 시험·분석 지원 등 특례

-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현행 규제 사항) 식약처 고시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에는 검사수수료 감면, 할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주력산업으로 농생명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기존 기업들은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제품개발 및 인허가에 따른 품질검사 비용 부담이 큼
- 도내 농생명 바이오산업 기업에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산업 관련 제품의 GMP 의무화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제도 폐지를 추진 중으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식품·바이오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시험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식품·바이오기업은 영세한 편으로 소비기한 관련 실험인력 및 기기가 미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실정
- (개선 방안) 기회발전특구 내 바이오 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험·분석 지원 특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시험·검사에 관한 검사수수료 감면하고자 함

■ 의료영상정보 등 홀로그램 규제 특례

- (관련 법률) 의료법 제19조
- (현행 규제 사항) 현재 의료산업에서 영상정보로 CT, MRI 등 방사선 기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기록 및 처방 기록 등은 의료법에 따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못해 의료영상정보용 홀로그램 개발 시 정보 접근 한계
- (개선 방안) 의료영상정보용 홀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실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정보를 제공받아 홀로그램 정보로 가공해야하기 때문에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의 허용 가능성에 확인 요청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헬스케어섬유 위생용품에 관한 실증 특례

- (관련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
- (현행 규제 사항)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은 영업자와 그 종원원이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그 원료의 위생적 보관 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 가운데, 품질관리, 실적 등을 지자체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업체 부담가중
- (개선사항) 규제자유특구내 위생용품 기업의 경우 지자체 관련 보고 예외 또는 식약처 품질인증서로 대체

2) 연계과제

■ 고성능 활성탄 제조 분야의 국가 기반 산업으로 지정 및 관련 제도 마련

- (현황) 반도체, 액정부품, 의약품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인 고성능 활성탄은 전량 해외에 의존
 - 각종 산업(특히, 반도체, 전자소재, 전지 및 국방(방독면)이 고도화 집적화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종류 및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외부 공기에서 유입되는 고농도의 다양한 가스상 오염물질들로부터 고정정 유지를 위한 활성탄 제품의 원천 소재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임
 - 고성능 활성탄 소재는 반도체, 액정부품, 의약품 산업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문제점)
 - 현재 고성능 활성탄은 단가 등의 문제로 국내 기반 확충이 어려움
 - 활성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낮은 제조 원가 경쟁력임
 - 고성능 활성탄의 경우 일본 및 선진국 제품과 동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고성능 제품만 생산할 경우 생산 수지가 맞지 않아서, 중·저성능 활성탄과 함께 생산이 필요하나 원료 수급,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음
 - 활성탄의 경우 탄소 소재·장비 기술이 타 탄소 분야와 비교했을 때에도 선진국 기술수준과 격차가 큼
- 개선 방안
 - 고성능 활성탄 국산화를 위하여 활성탄 제조 분야를 국가 기반 산업으로 지정/제도 마련

다.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

1) 핵심과제

가) 규제/실증 특례

■ 대기환경 보전법에 관한 신속확인 특례

- (관련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현행 규제 사항) 승용차 및 버스 등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따른 가격경쟁력 등 유리

하지만, 목적기반형 모빌리티 특히 특장차 사업 분야에 혜택이 없고 전기특장차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기준이 없어 관련 제품 사업화에 어려움 관련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공해자동차 운행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으나 특수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구체적 기재가 없음

- (개선 방안) 특수목적 기반 유인 모빌리티(특장차 등)에 대한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거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별도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

■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3항 및 36조 제 1항
- (현행 규제 사항) 자동차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해야 하는 부품이며, 배터리 셀의 단종될 경우 변경된 사양의 배터리팩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 경우 배터리팩의 중량·용량 변화가 발생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아야 함에 따른 제작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 가중
- (개선사항) 규제자유특구내 목적기반 모빌리티 출고 후, 일정기간이 지난 모빌리티의 경우, 인증된 배터리팩으로 교체 시에 관련 모빌리티의 인증시험을 생략하거나, 간소화

■ 자율작업 농기계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 (관련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현행 규제 사항) 자율작업 농기계의 적용이 농지 이동 및 작업에 관련된 모빌리티 측면에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행 규제체계에 따라 모빌리티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규제에 직면할 수 있고, 농지 간 이동, 작업 지역의 효율적인 이동 등에 있어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사항) 관련 법률에 자율작업 농기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R&D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농기계 자율작업 시 농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특례

- (관련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현행 규제 사항) 현행 규제체계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시 현재 운영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수동형 및 전동형 휠체어 이용자 1명(동승자 추가 탑승가능)만 이용 가능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시 차량1대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 매우 비효율적이며 더 나아가 교통 혼잡도를 높여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애로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사항) 관련 법률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 지원계획을 추가하고 관련 교통수단에 다수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

■ 홀로그래프 HUD 실증을 위한 도로교통법 완화

-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현행 규제 사항) 현행 규제체계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70%로 그 미만은 금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앞유리에 HOE 필름을 부착한 HUD는 최대 투과율이 60~64%로 낮아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저촉됨
 - 홀로그래프 HUD는 차량의 각종 안전 정보를 운전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실험실 단위로 시행되어 선진국의 실차테스트 시험대비 기술개발이 늦어지는 한계로 기술 종속이 지속되고 있음
- (개선사항) 홀로그래프 HUD 실차 테스트를 기회발전 특구 지정지자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신설

■ 탄소 복합소재 소형 선박적용을 위한 구조 및 설비 실증 특례

- (관련 법률) 어선법 제3조, 선박안전법 제18조
- (현황) 탄소복합재 선박의 난연성 및 구조강도 향상을 위한 보강/보조재료 사용에 대한 기준 부재
 - FRP선박 건조 기준인 「어선구조기준, 총 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내 선체 및 기자재의 CFRP 보강재 적용 가능 규칙을 제정/개정하여, 안전성/신뢰성 향상
 - 저렴한 제조 단가로 인해 FRP 어선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FRP어선 구조기준을 통해서 제작된 어선의 해양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차세대 선박으로 알루미늄, CFRP만을 사용한 선박은 고가의 원재료 사용 따른 선박 가격 상승으로 선박 보급이 어려워, 현행 FRP선박 제조기준 개정을 통한 선박 안전성 향상 방안이 필요
 - FRP선박 제조를 위한 제작기준에 CFRP 소재를 보강재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화재 안전성을 보완한 어선 제작이 가능하며, 고강도의 CFRP 소재 사용으로 선체 및 기자재의 두께 감소가 가능함
 - 선체 및 기자재 두께 감소를 통해 선박 경량화가 가능하며, 선박 경량화를 통한 연비향상 효과가 15~23%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탄소저감 효과가 있으며, 두께 감소에 따른 제작 기간 단축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함
- (문제점)
 - CFRP 어선적용 안전성 평가 기준 부재에 따른 실제 사업화 적용의 어려움
 - 탄소복합소재(CFRP 등) 적용 선박 및 기자재의 구조 강도 및 난연성 향상을 위한 보강/보조재료 사용에 대한 규칙 및 규정 부재(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FRP선 규정/규칙에서는 탄소복합소재 적용 시 선체 및 기자재의 두께, 보강재의 구조, 적층 순서, 시험 방법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선체/기자재의 기준이 없어 승인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FRP 선박 및 기자재 제작 시 CFRP 소재를 활용하여 구조강도 개선, 안전성 향상 등 품질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에도, FRP 구조기준에 따라 제작함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저하 및 탄소복합소재 적용 기술 상용화 문제 발생

- (개선 방안) CFRP 소형어선의 구조기준 마련을 위해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 개정
 - 선박의 구조기준 제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담당하며, CFRP 선박 자유특구 관련은 중소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및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에서 담당함
 - 「어선법」 제3조에 의해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야하며, 「선박안전법」 제18조에 의해 소형선박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0조에 의하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며,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도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2) 연계과제

가) 전북여건 특화산업 선정

■ 목적기반 모빌리티 협력업체 교류 확대 지원

- (현황) 목적기반 모빌리티 관련 부품 생산과 설비 제작을 위한 뿌리기업이나 단위부품 공급기업을 주변에서 확보하기 어려움
 - 전장부품이나 모듈을 제작할 때 필요한 단위 부품의 수급과 제품의 안정적이고 수율높은 공정을 위한 뿌리기술 보유기업 확보의 어려움 존재
 - 일부 부품이나 뿌리기술 공급업체의 경우 환경문제로 인한 입지조건 확보의 어려움 존재
- (문제점) 기술 고도화와 제품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 타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급기업을 주변에서 대체 확보하기 어렵거나 수요 대기업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공급기업 확보의 어려움
- (추진 방안) 기회발전특구내 또는 인근지역의 뿌리기업이나 협력업체와의 교류 확대 기회 필요
 - 목적기반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요하는 기업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 필요

라. 이차전지 산업

1) 핵심과제

가) 규제/실증 특례

■ 탄소소재 부산물/폐기물의 재활용

- (관련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 (현황) 탄소소재 부산물은 폐기물로 인식되고 있음.
 - 폐기물 관리법(시행 21.7.2 법률 제 17851호)에 의한 재활용 불가재료 다수 (예시: 폐흑연가루는 지정폐기물(분류번호 51-43-00)로 재활용 분야 제한적)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제도: 재활용 기술개발(또는 제품화) 따른 비용 지원 없으며(자가매립후 재활용, 소각열회수, 중소기업 등만 감면 대상),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만 해당함
 - 자원순환 기본법: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하나 탄소재 부산물 및 폐카분류는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만족하기 쉽지 않음
 - 또는 세제감면 혜택, 재활용 기술 개발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인력 지원, 폐카분류에 대한 폐기물 기준, 순환자원 기준 등 신설 필요
- (문제점)
 -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기준으로,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인식되어 재활용 시 복잡한 행정절차 및 기간 소요
 - 현 법규상, 고부가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재임에도 일부 부산물은 폐기물 신고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임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후보군을 폐기물로 등록해야 하나, 폐기물의 재활용 분야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쉽지 않고, 기존 분류에 미해당 되거나 신규로 등록하기 어려우며, 폐카분류에 대한 기준 부족
 - 행정절차 및 사용 허가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음
- (개선 방안)
 - 국내 탄소소재 부산물(또는 폐카분류)의 재활용에 대한 허가제도 완화 및 부산물/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실증 사업 추진

- 탄소소재 부산물 재활용 관련 재활용 환경성 평가 패스트트랙 마련
- 탄소소재 부산물 재활용 시 비용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 폐기분류에 대한 폐기물 기준, 순환자원 기준 필요

마. 관광산업

1) 핵심과제

가) 규제/실증 특례

■ 옥내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

- (관련 법률) 빔공해방지법 제11조, 빔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옥외광고물법 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 (현행 규제 사항) 빔공해 방지법에서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최대 휘도는 $1,500\text{cd}/\text{m}^2$ 으로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광고물은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최대 휘도 $3,500\text{cd}/\text{m}^2$ 까지 발광하는 옥내외 고휘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wing TV, 투명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할 수 없으며, 디자인 및 콘텐츠 교체 시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함
 -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고 전북에 집적화된 홀로그램 전문기업의 디스플레이어 상업화 보급이 불가능 하여 기업 성장이 한계가 있음
- (개선사항) 유동인구가 많은 야간 특정 시간대(일몰 후 60분~21:30)에 한하여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디지털광고물 표시는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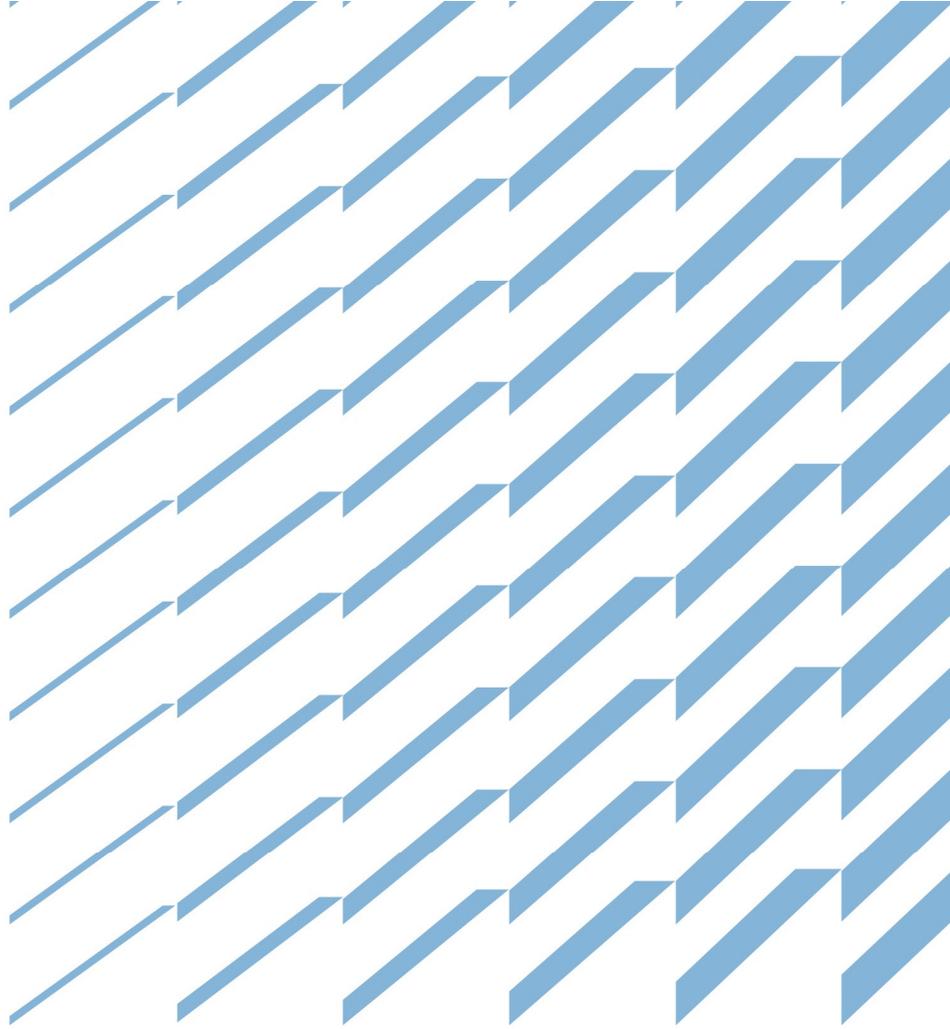
바. 드론 및 방위산업

1) 핵심과제

가) 규제/실증 특례

■ 탄소소재 부산물/폐기물의 재활용

- (관련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 (현황) 탄소소재 부산물은 폐기물로 인식되고 있음.
 - 폐기물 관리법(시행 21.7.2 법률 제 17851호)에 의한 재활용 불가재료 다수 (예시: 폐흑연가루는 지정폐기물(분류번호 51-43-00)로 재활용 분야 제한적)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제도: 재활용 기술개발(또는 제품화) 다른 비용 지원 없으며(자가매입후 재활용, 소각열회수, 중소기업 등만 감면 대상),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만 해당함
 - 자원순환 기본법: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하나 탄소 재 부산물 및 폐카본류는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만족하기 쉽지 않음
 - 또는 세제감면 혜택, 재활용 기술 개발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인력 지원, 폐카본류에 대한 폐기물 기준, 순환자원 기준 등 신설 필요
- (문제점)
 -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기준으로,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인식되어 재활용 시 복잡한 행정절차 및 기간 소요
 - 현 법규상, 고부가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재임에도 일부 부산물은 폐기물 신고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임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후보군을 폐기물로 등록해야 하나, 폐기물의 재활용 분야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쉽지 않고, 기존 분류에 미해당 되거나 신규로 등록하기 어려우며, 폐카본류에 대한 기준 부족
 - 행정절차 및 사용 허가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음
- (개선 방안)
 - 국내 탄소소재 부산물(또는 폐카본류)의 재활용에 대한 허가제도 완화 및 부산물/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실증 사업 추진
 - 탄소소재 부산물 재활용 관련 재활용 환경성 평가 패스트트랙 마련
 - 탄소소재 부산물 재활용 시 비용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
 - 폐카본류에 대한 폐기물 기준, 순환자원 기준 필요



제 5 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 ‘기회발전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의미하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대응한 핵심 공약사업임
 -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브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의 인하 등이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주요 동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으로, 기업 유치 여부가 특구 지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기회발전특구 및 기업 유치 환경을 평가해보자면, 먼저 관련산업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GM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서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그 이후 산업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수행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게 되었고 공공 R&D 기관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공공 지원이 수행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산업 규모가 영세하고 앵커기업이 부재하여 민간 부분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후방산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유인 요인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투자 환경 측면에서는 새만금의 산업용지 조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대규모 개발 가능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KTX를 통해 수도권으로부터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충청 지역 다음으로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건립이 계획되어 있지만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면

적인 재검토와 예산 축소로 인해 글로벌 교통망 구축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이외 다른 지역은 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을 이루고 있고 IT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산업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산업 육성 및 고도화 정책 수립에 대한 노하우를 얻었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선 7기를 넘어서는 유치 실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향후 유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청년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 인력 수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의 인구 규모가 60만명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생활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만큼의 정주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수도권 기업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수도권에 기업의 생산 활동에 있어 최적지이고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거래처와의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인센티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의 이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시장접근성과 관련 산업의 집적효과, 인력 수급 용이성으로 꼽을 수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단독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연계 기업을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함
 -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 조사를 하고 공급 가능한 신규 산업단지들을 조사한 결과 10개의 후보지를 도출하였으며, 각 후보지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2024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남원 일반산업단지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로 5개 지역임
- 이 중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제도를 중

복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정 우선순위에서 떨어짐

- 남원 일반산업단지과 고창 신활력산업단지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 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2024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지만, 정주환경 및 연계산업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전주 시내에 있어 정주환경이 좋고 공공 부문 혁신기관과 교육기관이 인근에 집적해 있어 기업 투자 환경이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 1순 위임
- 2024년 이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김제에 있는 지평선2산업단지과 백구2산업단지로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할 경우 연계산업과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지정 가능성이 높음
 - 만약 2024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할 때, 2024년 분양(혹은 입주)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 협약 체결을 통해 2025년이나 2026년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있을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2024년에 김제의 두 개 지역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2023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지역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27년 이후에 분양 및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어려우며, 혁신도시에 건립될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 역시 2027년에 공급 가능하여 이들 지역은 별도의 방식으로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회발전특구의 타겟산업은 전라북도 주력산업이면서 최근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타겟산업별로 기업 유치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농생명바이오산업의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대상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남원 일반산업단지로 유치하는 방향을 접근하되, 남원의 경우 입지적으로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읍첨단산업단지나 익산 원광대 인근 개별입지를 확보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정읍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광대는 연구개발특구 확장 예정에 있음
- 또한 현재 전라북도는 전주, 익산, 정읍을 트라이앵글로 묶어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농생명바이오산업 기업 유치 방향에 부합함
-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의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1순위 유치 지역으로 두고 유치 협상을 하고 기업의 규모나 비용 측면에서 김제의 백구2산업단지와 지평선2산업단지를 2순위 유치 지역으로 둘 수 있음
- 다만,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목적기반 모빌리티의 부품·소재에 특화된 기업 유치에 적합하고 김제 산업단지는 완성품 제조 기업 유치에 적합함
-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게 될 경우, 한 지역에 집적화하여 하나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방안과 기초 지자체간의 연계 발전을 위해 분산 유치하여 다수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검토는 추후 진행하고자 함
- 이차전지를 포함한 에너지산업의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와 가까운 김제 지평선2산업단지를 1순위로 두되,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새만금 산업용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관광산업의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기능을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전주 혁신도시, 테마파크나 유원지 사업을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1순위 유치 지역으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드론 및 방위산업 기업과 유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1순위 후보지역으로, 남원 일반산업단지를 2순위 후보지역으로 두되, 유치 의향 기업이 대규모 실험 및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만금 관광용지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전라북도는 2024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최근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됨에 따라 2025년부터 생명산업, 전환산업 육성 사업과 여러 유형의 투자 유치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기업유치를 도모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함
- 농생명바이오산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주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6군데 지역으로 이 중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유치 가능한 지역은 전주 혁신도시와 남원 일반산업단지이며, 추가적으로 익산 원광대 인근 개별입지와 정읍 첨단산업단지 인근 개별입지를 고려할 수 있음
-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화장품 등과 연계한 바이오산업에 특화하여 기업 유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전북특별법의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정 효과가 없지만, 앵커 기업의 역할 및 규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음
-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주-익산-정읍 간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등의 특례를 통한 시책 추진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생명바이오산업 기업 유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7군데 지역으로 이 중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유치 가능한 지역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김제 백구2산업단지와 지평선2산업단지이며, 새만금 산업용지와 전주 BYC 공장부지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음
- 목적기반 모빌리티산업 대상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와 김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인근 기 운영 중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제의 2개 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북특별법으로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하여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음
- 전라북도에서 이차전지산업 기업 유치 최적의 환경을 가진 지역은 새만금 산업용지로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기업 투자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1순위로 둬
- 새만금 산업용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인근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산업 집적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완주 수소특화단지의 경우에는 분양 시점이 늦어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융복합 R&D와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거점으로 활용하여 추가 수요에 대비하는 방식이 적절함
- 관광산업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종합 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전라북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특별법을 통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을 하는 조건으로 동부권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방위산업의 경우, 현재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발사 시험체 실증을 위해 대규모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 협상이 1~2건 진행되고 있어 방위산업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함

2. 정책 제언

- 최근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회발전특구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도권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한다고 해도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이 요구됨
-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의 입지 환경에 비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과 강원권이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까지 지역 전략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서북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 정주여건과 경제성을 확보한 신규 공급 가능지역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까지 2~3년 이상 남아 있는 산업단지가 대부분이라 바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아직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도간, 시군간 낙후도 차이에 따른 인센티브 수준을 차등화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2~3년간 입주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는 기회발전특구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법 제정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들을 다수 신설하였지만, 초기 특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반대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빠진 상황임
- 따라서 기업유치 환경을 다지기 위해서는 전북특별법의 추가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국토연구원. (2022). 국가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 대한뉴스. (2023.03.27.).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3~`27)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산업부·균형위 공동개최. <http://www.dhns.co.kr>
- 상생형지역일자리. <http://webarchives.pa.go.kr/19th/sangsaeng.jobs.go.kr/usr/com/index.do>
(확인일 : 2023.12.18.)
- 양원탁(2023),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의 특성과 기회발전특구 조성 방향 설정
- 전북연구원(2022).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방안 연구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845>
- 전북연구원(2022).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입지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 발전체계 구축 필요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886>
- 통계청. 지역소득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등록공장현황

Research on a Jeollabukdo-specific Model for Attracting Enterpris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Si-Baek Kim · Soo-Eun Kim · Miseon Jeong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

- This preparatory study aims to create a Jeollabukdo-specific blueprint and action plan to bolster the region's potential designation as an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ODZ). Additionally, in the case of non-designation, it proposes alternative ways of attracting companies to the region.
- We set our sights on providing a detailed framework of the Jeollabukdo-specific ODZ by analyzing the data that has been comp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collaborative project entitled "Preliminary survey for the 2023 ODZ planning."
- We also seek to derive core and subtasks to build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specialized industries,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levant personnel that constitute the ODZ, laying the foundation for master planning.
- Moreover, we will be focusing on developing a valid "Plan B" for attracting businesses should the region not be designated as an ODZ within the next five years.

- The locations and target industries that are eligible to operate in ODZs will be selected by evaluating general conditions, preparedness, and corporate demand.
 - Drawing on the results of the first demand survey conducted by Jeollabukdo, we targeted ten locations, depending on staggered ODZ project schedules, and assessed their general conditions.
 - We plan to conduct additional research on potential areas that are subject to the expansion of the Jeonbuk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by referr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our previous policy task “A study on the spatial expansion of the Jeonbuk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 We conducted a competitive analysis targeting six innovative growth industries, industries related to sites eligible for ODZs, and industries to which companies showing willingness to invest belong; we subsequently derived the industries that coul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 During our first round of research, we focused on new energy industries, such as secondary batteries, agricultural life and bio industries, and purpose-driven mobility industries. We then conducted additional research targeting 1) industries linked to candidate sites that were selected from the demand survey and 2) industries related to companies with investment intention, identified in the preliminary survey.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We propose a business attraction model by not only designating ODZs but also applying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Jeonbuk Special Act.
 - We propose that four ODZs out of six candidates be designated for agricultural life and bio industries. Specifically, the local authority is advised to implement projects through the special provisions “designation of agricultural life and bio-industrial districts” and “promotion of

bioconvergence-related industries” to develop relevant infrastructure and devise incentive schemes to facilitate business attraction.

- For purpose-driven mobility industries, we recommend that two city/county ODZs be designated to serve as anchors for neighboring industrial complexes and agro-industrial complexes and attract businesses and promote industries.
- Regarding ODZs for the secondary battery industry, the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the first choice; the second battery companies that the complex is unable to accommodate can be directed to nearby regions to maximize the industrial clustering effect. To prepare for additional demand, we propose that the Wanju Hydrogen Specialized Complex be leveraged as a hub for convergence R&D on secondary battery materials and upstream and downstream sectors of secondary batteries.
- We propose the following two-track strategy for tourism: 1) attracting tourism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Saemangeum Comprehensive Plan currently being revised by the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and 2) attracting investments to develop tourism in the eastern region, subject to the region being designated as an eco-friendly mountain tourism promotion special zone, under the Jeonbuk Special Act for balanced development in Jeollabukdo.
- Concerning the defense industry, one or two investment negotiations are currently underway to target the Saemangeum industrial and tourist sites, and their outcome is contingent on securing a large area of land to test large-scale launch vehicles. Therefore, these Saemangeum sites should be designated as ODZs for the defens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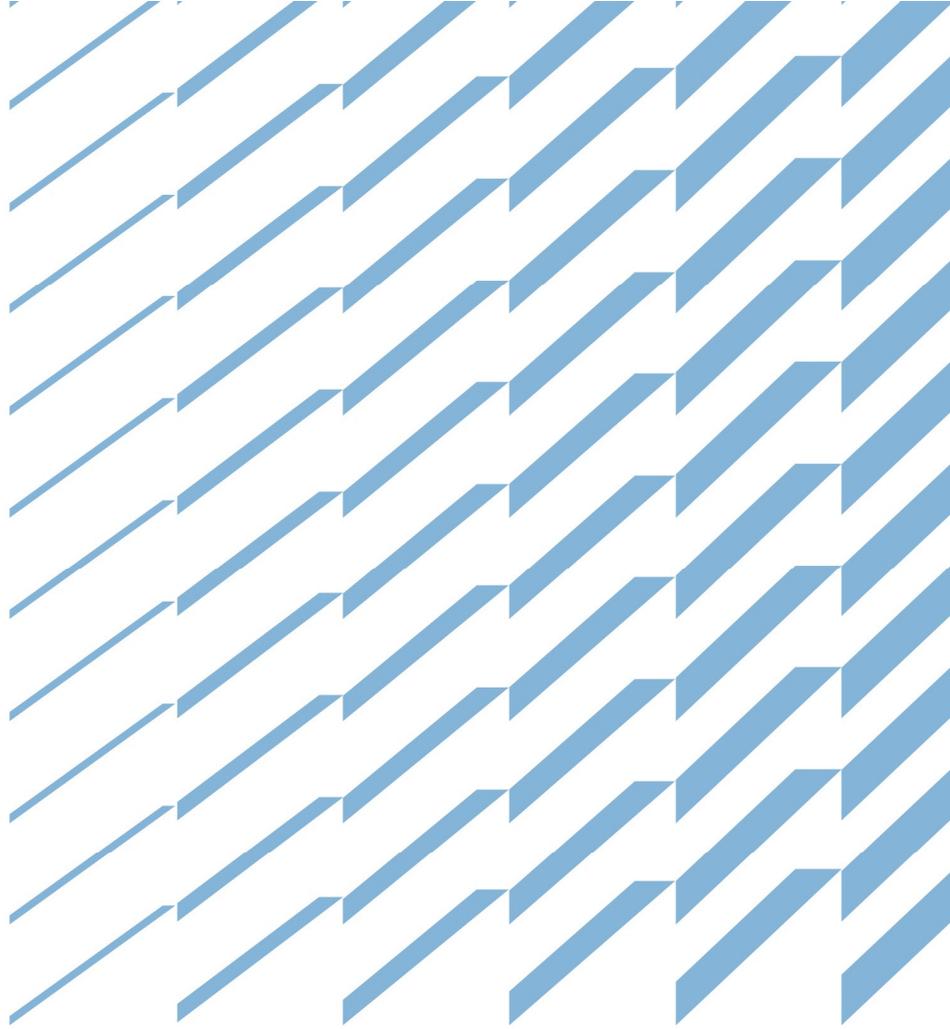
■ A differential incentive system is required for ODZ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region.

- It is advised that Chungcheong and Gangwon provinces, which are adjacent to the metropolitan area, be designated as ODZs with the same incentive across regions, while Jeonbuk is required to pursue a differential incentive scheme and deregulation.

Key Words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ODZ), Industry-Specific Business Attraction,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



부록

1. 전라북도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위한 설문조사



부 록

APPENDIX

1. 전라북도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위한 설문조사

<p>안녕하십니까. 저희 전북연구원은 2024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p> <p>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법인세 인하 및 감면,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여러 유형의 규제 특례와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근로자의 정주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p> <p>이와 관련해 지방으로 유치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는 약 5분이 소요되며, 수집된 정보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응답에 협조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 10. 19. (재)전북연구원 원장</p>	
담당자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김시백 연구위원(063-280-7131, kimbio96@jthink.kr)

기업 기본 현황

1. 사업체명	
2. 본사 소재지	
3. 본사 기준 종사자수	
4. 주요 생산품	

문1. 귀사는 향후 5년 내 본사 이전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문2. 윤석열 정부는 2024년부터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문3. 만약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귀사는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5로
- ② 아니요 ⇒ 문4로

문4. (문3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만)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있음에도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기회발전특구 제도에서 주는 세제 혜택이 큰 메리트가 없어서
- ② 이전 비용이 부담되서
- ③ 종사자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 ④ 인력 수급 불편이 예상되어서
- ⑤ 기존 거래 기업과의 거래 차질 발생이 우려되어서
- ⑥ 현재의 위치가 기업 입장에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 ⑦ 기타 ()

문5. 지역별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예정인데, 만약 이전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시장접근성
- ② 합리적인 부지 매입 비용
- ③ 집적효과(관련 기업들이 동일 지역에 존재하여 유리)
- ④ 연구시설, 실증화시설, 지원기관 등 자사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시설 등이 단지 내에 입지
- ⑤ 인력 수급의 용이성
-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우월성
- ⑦ 기타 ()

문8. 만약 앞서 응답한 혜택과 지원을 포함하여 원하는 위치에 전라북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경우 이전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9로
- ② 아니요 ⇒ 설문 종료

문9. (문8에서 예라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기업이 이전하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이전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신규 투자 ⇒ 문10로
- ② 현재 위치한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투자 ⇒ 문11로
- ③ 현재 위치한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및 추가 신규 투자 ⇒ 문11로

문10. 만약 전라북도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할 경우, 어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획 : 면적 ()평, 투자금액 ()억원

문11. 만약 전라북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현재 위치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전 및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존 : 면적 ()평, 투자금액 ()억원
계획 : 면적 ()평, 투자금액 ()억원

문12.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추진되면 2024년부터 기업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입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1년 이내
- ② 2년 이내
- ③ 3~5년 이내
- ④ 5년 이후

문13. 만약 전라북도에 기회발전특구가 계획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귀사는 이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지역을 찾아 투자하실 예정입니까?

- ① 투자를 포기한다 ⇒ 문15로
- ② 대체 지역을 찾아 투자를 추진한다. ⇒ 문14으로

문14. 대체 지역을 찾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충청권 ② 대구경북권 ③ 부산경남권 ④ 강원권 ⑤ 제주도

문15.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귀사의 매출액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① 매출액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②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담 당 자	성함·직책	
	연락처	
	전자우편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책연구 2023-32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업유치모델 연구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09-8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슬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 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